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인쇄/1997년 12월 27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13-3

8,500원

학술회의 총서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사회연구회 공동주최
SBS 문화재단 후원
학술회의(97.10.20)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개 회 사

오늘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이라는 주제하에 SBS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북한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통일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주신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의화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북한 체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년여간의 공식 끝에 김정일이 총비서직에 취임하기는 했으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때문에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통일이후 독일 사회내의 동서갈등 문제가 보도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만, 남북한의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사회통합에 대한 대비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 사회통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폐쇄주의 정책을 유지해온 북한과 사회통합을 하는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족간에 전쟁을 치르고 오랫동안 적대적인 대결상태에 있었던 남북한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독일통일의 사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갈등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비교사회론적 시각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 문제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학술회의는 저희 민족통일연구원이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세영 SBS문화재단 이사장님의 후원을 받아 통일문제 관련 사회학자들의 연구단체인 북한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런점에서 오늘 회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고견을 나누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의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997년 10월 20일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丁世鉉

환 영 사

같은 조상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국가체제, 사회경제적 구조, 대외관계 속에서 50여년을 생활해 온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분단상태에서 극명한 분리와 이질화 현상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는 시대사적인 사건으로서 세계체제의 변화 및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이라는 중요한 사회과학적인 함의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시장체제로의 이행은 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한간의 통합이라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속에서 그 동안 북한체제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는 급속히 확산되어 상당한 연구결과들을 축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북한 사회와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년여 동안 북한에 관심이 있는 사회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매달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들을 오늘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갖게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가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통일 연구원과 함께 SBS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공동학술회의의 장을 연 것에 대해 북한사회연구회는 더욱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남북한간의 진정한 통합이란 외연적인 제도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집단이 한 사회로 통합되어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성원간의 실질적인 통합상태의 달성에 있는 만큼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학술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한간의 사회성원들의 새로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이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SBS 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7년 10월 20일

북한사회연구회

회장 田淑子

- 차례 -

개회사	i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환영사	iii
전숙자(북한사회연구회 회장)	
◆ 회 의	
I.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1
전성우(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I.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45
장경섭(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II.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통합의 관점	77
전숙자(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IV.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128
박형중(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157
회의일정	184
<부록> 민족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목록	186

I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전 성 우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1. 서 론

이 글에서 필자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이 가진 사회학적 함의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통합’이란 정치, 경제, 법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체제통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체제통합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과 의식의 차원에서 대응하는가 라는 것이 이 개념에 깔린 문제의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의 ‘인간통합’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¹⁾ 따라서 사회통합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한 사회의 집단적 자의식,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연대방식 등이며, 고찰의 주된 대상은 사안의 성격상, 통합의 ‘대상’이 되어있는 구동독 국민들로서 이들이 갑작스러운 체제전환에

1) 이 두 가지 통합과정이 현실적으로는 밀접한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단지 분석적 의도에서 서술의 초점을 사회통합쪽에 맞추고 있을 뿐이다.

2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직면하여 겪고 있는 행위 및 의식형태의 변화이다.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동독의 붕괴는 현실적 대사건²⁾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아주 희귀한 학문적 분석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실험실에서도 설치하기 어려운 차원의 '자연적 실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40년 동안 전혀 이질적인 조건하에서 살아온 두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의 사회와 민족으로 통합되는가 또는 통합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학문적 '매력'으로 인해 이 대변혁은 지금까지 통일문제나 동독문제에 특별한 전문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전에 없는 열정으로 이 문제의 분석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급조된' 독일문제 분석가에 속한다. 모든 급조된 것이 그러하듯, 필자의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역시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냉철함보다는 '아마추어적 열정'에 더 빠져 있음에 대해

2) 이 글에서는 전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대변혁이 가진 국제 내지 유럽 정치적 함의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의 유럽에서는 마치 웰즈(H.G. Wells)의 타임머신이 작동한 듯 한 바, 왜냐하면 역사의 시계는 전진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럽지도에는 이제 옛날의 국경선들이 다시 나타나며 새로운 국경선들이 그 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게오르기안은 부활했고 발틱 3국은 다시 지도 위에 나타났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경계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그어진다. 물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과거 부활'은 통일된 독일이라는 거대국가의 탄생이다. 약소국들에 둘러싸여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에 대해서 이제 동쪽으로는 어떤 대항세력도 없다. 이것이 독일의 오늘날의 객관적인 위상이다. 동유럽은 와해되어가는데 독일은 통일되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치금 원심력적 세력들이 수많은 국가들을 새로운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데, 가령 유고슬라비아는 사라졌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분리된 두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만 구심력이 작용하여 옛 구심점을 회복시켰다. 즉 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중부유럽이 다시 지도 위에 나타났고, 이 독일은 전 유럽의 열쇠가 되고 있으며 이 상황에 대해 주변국가들은 불안과 우려에 차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한다. 물론 이 변혁은 이미 완결된 장이 아니라 아직 그 결말이 어떻게 날 지 알 수 없이 한창 진행중인 과정이며, 따라서 엄밀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이 과정에 관여된 변수들이 아직 너무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런 이유에서도 이 과정에 대한 모든 연구는 현재로서 불완전하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동서독 통일문제를 논하는 어떤 한국인도 -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 냉정한 제3자적 관찰자일 수는 없다. 재판과정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편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로 이 문제에 관한 심리(審理)에서 기피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동서독의 통일 자체,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독일문제를 논하는 한 부지불식간에 독일식 통일이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는 가치판단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판단은 남북한통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글의 주제인 동서독의 사회통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독일에서 사회통합이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가치관점하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 가령 동독인이 다 서독인처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사회통합의 '성공'인가?

필자는 독일식 통일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가령 서독이 동독을 일방적으로 흡수통일했다 -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일방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의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 는 데 대한 도덕적 비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989~1990년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서독 국내 정치적 조건들 및 특히 1989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동독 국민의 통일염원을

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고려하면 독일로서는 이러한 흡수통일 이외의 다른 대안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방식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입장이 가령 흡수통일이 가진 엄청난 재정적 비용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분단비용'과의 비교라는 문제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다른 어떤 대안방식도 이에 못지 않은 비용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흡수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상기한 입장이 가령 현실사회주의의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낳은 엄청난 모순들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의 '독일식' 통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결국 특정한 가치이념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필자는 만약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흡수통일방식을 피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러한 흡수통일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을 객관적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의 대안적인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대안추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형'과 '사회모델'이 어떠한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서구적 근대성(제1근대성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발생했다)은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성공으로 인해 이제 결정적인 한계에 도달했고, 사회주의적 근대성(제2근대성은 전자보다 후에 발생)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파기의 대상은 아니며,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근대성의 결합으로서의 제3의 근대성이다. 이런 지향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는 바, 왜냐하면 동구체제의 붕괴 및 냉전의 종식이 비로소 사회주의를 제국주의적 해계모니전략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는 비로소 자본

주의와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선택 혹은 포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대화전략으로서 검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제3의 근대성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최초의 국가였지만, 주지하다시피 이 가능성은 배제한 채 통일이 추진되었고, 이것이 필자가 독일식 통일방식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필자의 가치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물론 만약 남북한의 통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훈마저도 많은 경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다. 즉 어떤 정책을 쓰면 안되는지 라는 의미에서 이다.

물론 방금 암시된 대안적 통일모델 추구라는 '거창한 주제'는 전혀 이 글의 주된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아래에서 시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가용한 제한된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7년 후의 독일상황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이 과정이 가진 사회학적 함의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통일 7년 후의 독일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한 후 사회통합의 전반적 상황을 개괄하겠다. 연이어 4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형성되어 온 동독국민의 심리적·사회적 성격, 즉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분석한 후 이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통일과 함께 서독의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겠다. 그 다음 독일의 통일정책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 가진 함의를 간략히 고찰해 본 후 마지막으로 남북한통일에 대한 몇 가지 '공상적 단상'들을 '제2의 건국론'이라는 제하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통일 7년 후의 독일 상황

'90년 초 콜 수상은 5년 이내 동독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엘베강의 기적을 재생해 내겠다고 장미빛 미래를 동독인들에게 약속했으며, 동시에 서독인에게는 이러한 제2의 기적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인상없이 동서독의 경제부흥을 통해 조달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콜 수상이 약속한 5년을 훌쩍 넘은 현 시점의 독일상황은 그가 장담했던 낙관적 미래상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경제의 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또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콜 수상을 비롯한 그 당시의 급진적 흡수통일론자들이 자신들의 낙관론에 깔았던 경제정책적·사회심리적인 전제들이 거의 대부분 근거없는 '희망사항'이었던 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당시 소위 '일시적 난국'의 명제를 내걸었는 바, 이에 의하면 옛 구조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구조들에 대한 기초가 쌓여지는 일종의 '정화위기'가 극복된 후에는 새로운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안이한 낙관론에 바탕해 내려졌던 경솔한 정책결정들에 대해 지금 독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흔히 지적되는 정책적 오류들은 황급하고 구조·정책적으로 숙고되지 않은 통화통합, 토지소유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선 환원, 후 보상' 재정수요의 과소평가(그 당시 정부는 단순히 동독경제의 시동, 즉 재정공급만 해주면 급속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상정했다), 시장만능주의적 산업구조정책(가령 10,000여개의 동독기업들의 처리를 담당할 신탁관리청의 무조건적인 사유화정책의 부작용), 서독내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효율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아오고 있던 각종 제도와의

정책의 단순 이식으로 인한 비효율과 불협화음 등을 들 수 있다.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취해진 이러한 경제정책적 오류들이 구동독 경제체제의 부정적 유산들과 어우러져(Reißig, 1993) 동독경제가 통일 이후 급격한 '탈산업화'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많이 서술되어 왔다(가령 '90~'91사이에 동독의 BSP는 '89년 대비 50%가량 급감했다). 물론 이렇게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던 동독경제가 대개 '93년경부터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지표변동에서 드러난다. 가령 구동독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91년에는 서독의 31.3%였으나 '94년에는 50.6%로, 그리고 '96년에는 54.5%로 늘어났다. 그리고 '93~'94년 사이 동독지역의 국내총생산량의 증가율은 9.9%에 달하였으며 구동독인들의 임금 수준 역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서독인의 84%에 이르고 있다. 또한 '93년이래 동독경제의 성장기반 역시 확대되었는 바, 즉 그전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서비스부문 외에 특히 건설업이 성장산업으로 추가되었다. 그 외에 일부 내수용 가공업, 교통산업 등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건설업에 비하면 그 성장효과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IW-Trends, 1994)

그러나 '93~'95년경까지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이 아직도 얼마나 허약한 기반을 가진 잠정적 현상인지는 여러 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이 성장은 자생적 산업생산의 확대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이전을 통해 달성된 것이다. 가령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동독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 '90~'93년까지 성장한 거의 유일한 부문은 건설업이며(성장을 18.1~32.4%), 나머지 기본재 및 생산재, 투자재, 가공업 등 중요 생산부문에서는 모두 생산지수의 상당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구

8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조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재부문, 특히 기계공업이다. 이 부문은 거의 2/3 이상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IW-Trends, 1994) 건설업 호황은 물론 엄청난 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와 확대, 주택건설 등에 기인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본은 '96년 현재까지 누계 총 1조1780억 DM(연평균 1600억 DM: 80조원)에 달하는 서독으로 부터의 재정이전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96년 동독지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대로 급락했으며 '97년 1/4분기에도 증가율은 1.8%에 그치고 있는 바, 이것은 동독경제의 기반이 아직도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독의 이러한 '결인 경제적 상황'은 지난 수년사이 동독의 국내 수요가 동독지역총생산의 두 배 가까이된다는 비정상적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생산과 수요의 이러한 괴리는 전적으로 서독측의 재정이전을 통해 충당됨은 물론이다. 재정이전이 수요를 안정시키고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동독에서 개인 가계의 수입과 공공기관의 예산을 동독의 경제적 생산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임금정책에서 효율성 기준보다는 분배기준이 작용되었으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예산확대를 조장했고 투자의 방향을 거의 전적으로 건설 쪽으로 쏠리게 했다. 재정이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기저로서의 질적 개선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만이 상기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이런 쪽으로의 발전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Wegner, 1994)

동독경제의 탈산업화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실업문제영역이다. 동독지역에서는 '89년에서 '94년 사이에 고용인구가 950만에서 약 600만으로 감소했다. 고용인구감소는 특히 제조업에서 극심했

는 바, '89년에서 '93년 사이에 이 부문에서의 고용인구는 거의 2/3가 감소하였고, 전체고용인중의 비율 역시 급감했다.(Wegner, 1994) 그리고 통일 7년째인 오늘날까지도 고용상황은 거의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7년 현재 동독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18.3%이나, 은폐실업자와 단축노동자를 합하면 실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의 27%정도이다. 특히 여성과 50대이상 고령층의 경우 실업률이 70~80% 정도까지 추산되고 있다. 실업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큰데, 왜냐하면 소위 시한부 '고용보조 프로그램'이 이제 곧 종료될 것이고, 지금까지 재교육 내지 직업전환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서독으로의 통근 및 조기퇴직을 통해 동독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이제 거의 쇠퇴했다. 이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실업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매우 완만한 개선만이 기대된다.

한 전망에 의하면 서기 2000년까지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약 9%(서독: 2%)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의 현격한 저하는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2000년에는 동서독 모두 아마 1991년보다 고용인구가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모델계산에 의하면 2000년에도 전체독일에서 약 330만, 거기다 예비실업자 260만 정도가 예상된다.(Brinkmann, 1994) 다시 말하여, 실업상황은 동독에서 고정화·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 7년 후의 통합상황 전반은 놀라운 '성공'과 심각한 '실패'가 혼재해 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성공'의 측면을 보면, 독일은 단기간에 정치·경제 및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법적·제도적 '체제통합'을 거의 완벽하게 이룩해 내었다. 이것은 아마도 독일인 특유의 법치국가적 지향, 관료적 조직력 및 완벽주의가 아니

있으면 해낼 수 없었을 엄청난 업적이다. 그 다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위에서 서술한 동독지역의 경제발전 문제이다. 즉 동독지역의 경제는 통일초기의 상황에 비하면 점차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허약하며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년 이래 관찰될 수 있는 동독경제 상황의 점차적인 개선이 과연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인지 아니면 하나의 일시적 회복국면에 불과한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통합 전망의 불투명성과 밀접히 연관됨과 동시에 이와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동서독 통일과정 전반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이것이 동서독 통일의 가장 심각한 '실패' 영역이다. 많은 관찰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도적 체제통합의 상당한 진척과는 달리 양 국민간의 사회적·심리적 통합은 아직 옹골치게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통일초기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야기시키는지 몇 가지 경험적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 '사회통합'의 전반적 상황

'94년 10월26일 제2차 전독 총선에서 집권 기민·자민연정은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는 야당연합에 불과 0.6% 포인트 앞서서 행승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승도 단지 구서독지역의 고정지지자층(가령 카톨릭지역, 벽지) 덕분이며, 구동독지역의 경우 12.6%의 득표율 하

락을 경험했는 바, 이것은 구서독지역에서의 손실을 48%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민·자민 집권당은 동독지역 6개주 가운데 작센주에서만 최다 득표 정당이 되었고 다른 모든 주에서는 야당이 최다 득표 정당이 되었다. 다시 말하여, 통일을 성사시키고 또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주도했던 현 집권당에게 동독주민들은 아직 결정적인 ‘결별선언’은 아니지만(집권당의 득표율은 여전히 40%를 넘는다),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경고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결과중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현상중의 하나는 구동독 공산상의 후속정당인 민주사회주의당의 약진이다. 민사당은 서독지역의 경우 0.9%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으나 동독지역에서는 1차 총선때보다 거의 100만표를 추가하여 18%의 지지율을 확보했으며, 4명의 직선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의석 배분규칙에 따라 30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민사당은 베를린에서는 최대정당(34.7%), 튀링겐주와 메클렌부르크와 포어폼메른주에서 자민당을 제치고 제3당이 되는 성과를 올렸다. 만하임 선거분석단에 따르면 동독지역에서 35세 이하 선거권자의 민사당에 대한 지지도는 23%, 60세 이상도 17%나 된다. 이런 지지율은 서독 언론매체가 선거기간 동안 민사당 지도층의 비밀경찰전력에 대해 집중적인 매도성 캠페인을 벌리는 등 민사당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서 선거운동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민사당의 이러한 급부상을 두고 독일에서는 한때 맑스의 유명한 말에 빗대어 “동독이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물론 이것은 너무 과민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민사당의 지지가 곧

구동독으로의 회귀희망의 표현은 아니며 절대 다수의 동독인은 지금도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것을 지지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상은 동서독의 사회통합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증거이며 따라서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현상이다.

물론 이 현상은 지난 해 10월 선거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 기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양독 국민간의 역통합적 과정이 그 첫 정점에 도달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독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초기의 환호는 통합에 대한 '충격'으로 대체된 지 오래이다. 통일후 7년 동안 두 지역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증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두 국민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 역시 매우 심화되었다. 그래서 '한 국가와 두 사회'라는 공식으로 현재의 상황이 묘사되곤 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동독인의 50%이상이, 서독인의 40%이상이 통일 이후 양국민간은 서로 오히려 더 생소해졌다는 답을 했다. 가령 서로에 대해 가지는 호의의 정도는 통일초기에 비할 때 절반 이상 감소했다. 즉 +5에서 -5까지의 스킬라에서 각각 서독의 경우 2.0에서 1.1로, 동독의 경우 2.7에서 1.7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독국민은 자신의 행위성향이 구동독인들과는 다르다고 보며, 더 나아가 이 차이를 '우등과 열등'이라는 범주로 포착하고 있다. 가령 서독인은 근면성, 합리성, 계획성 등 16개의 문항을 담은 동서독인 비교설문조사에서 13개항에서 동독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통일초기보다 동독인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본다. 그에 반해 동독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독인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면서 '인간적' 차원에서는 강한 긍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은 성격상의 특징은 "서독

인과 동독인중 누구에게 더 들어맞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동독인들은 응답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서독인	동독인
사회적 성향	12%	70%
정직하다	8%	63%
위험감수용의	57%	26%
사업에 능숙	62%	15%
오만하다	77%	4%

출 처: (Der Spiegel, 1994. 8.15. 제32권)

이런 강한 자의식과는 대조적으로 동독인들의 85% 이상이 스스로를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이등국민’이라고 느끼고 있다.(Koch, 1993)

그런데 동독주민들의 이러한 자괴감이 반드시 경제적 상황의 열악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점에서는 실업문제를 제외하면, 많은 지표가 일단은 개선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주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해 중반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귀하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92년말과 비교할 때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2. 11월	1994. 8월
매우 좋다	1%	5%
좋다	37%	49%
반반이다	48%	37%
나쁘다	11%	6%
아주 나쁘다	2%	3%

출 처: Der Spiegel, 1994. 8.15, 제32권³⁾

3) 그러나, 이렇게 주관적으로는 개인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비율이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객관적인 경제상황은 동독지역주민의 2/3가 여전히 열

상기한 자괴감은 오히려 사회 심리적 차원에 그 뿌리가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가령 동독주민의 79%는 “지금까지의 통일과정이 구서독 사회에 구동독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된 것을 불만스럽게 보고 있으며, 82%는 “우리가 동독시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중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Die Zeit, 1994. 10) 다시 말하여, 자기가 살아오면서 발휘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통일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 감정을 동독출신 정신과의사인 마츠(Maaz)는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전체가 잘못되었고 뒤바뀌었다”는 체험이라고 부른다.

또한 상기한 자괴감과 통일과정에 대한 저항이 가령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통일피해자 내지 낙오자’층(전체 동독주민의 약 27%: 40세 이상, 구 공산당 간부, 실업자, 조기정년퇴직자, 여성)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속단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79%의 상당수는 오히려 ‘통일수혜자’층(전체 동독주민의 약 17%: 30~40세의 남자, 직업보유, 자영업자)⁴⁾ 즉 새로운 ‘기득권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상기한 민사당의 약진에서도 증명되는 바, 왜냐하면 이 당의 지지자의 주축은 구동독의 당 엘리트 및 인텔리켄차 이외에 바로 동독지역의 신중산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가령 경제적 상황의 전반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인정도는 '90년 가을(74%)에 비해 빠른 속도로 그리고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1993년: 52%)에

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오히려 점차 멀어지고 있다.

- 4) 위에서 든 피해자와 이 수혜자층을 제외한 나머지 약 55%는 생활조건에서 통일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는 층이다. 그래서 동독지역은 지금 3분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해서도 뒷받침된다.⁵⁾

이런 제경향들을 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94년도에 한 여론 조사결과는 “많은 사람들은 동독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회주의 그 자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념 그 자체는 좋은 것이나, 정치가들이 이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믿는다. 어떤 의견에 귀하는 동의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사회주의 이념은 좋으나 정치가 무능하다’는 의견이 71%, ‘사회주의 그 자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의견이 21%, 무응답이 8%의 순으로 나왔다. (Der Spiegel, 1994. 8.15, 제32권)

다시 말하여 현실사회주의의 대파산에 대한 경험과 통일 이후 4년간의 경험을 비교하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2/3이상이 동독시절에는 단지 이 위대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가들이 부재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즉 자신들이 '90년 열렬하고 자발적인 지지로 선택한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지금 동독주민들의 다수는 모든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가령 만약 이주의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구서독지역에 살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동독인의 80%이상이 구서독지역에 살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데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독주민의 1/3은 아직도 소위 ‘제3의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는 동질의식의 정도,

5)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동독인들의 84%가 통일이후 좋아진 것으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거리가 깨끗해진 것을 들었다. 또한 동·서베를린에서 양쪽의 사람들이 갈수록 접촉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도 양지역 국민간의 이질감의 증대를 암시한다. 「한겨레신문」, 1997. 10. 3.

즉 동독국민이 스스로를 '동독국민'으로가 아니라 '독일국민'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동독주민의 37%만이 '독일국민'의 식을 가지고 있으며 42%는 아직 스스로를 오히려 '동독국민'으로 의식하고 있다.(1995년, Allensbach) 그리고 이 수치는 동독인들이 통일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1991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동서독의 사회통합과정은 지금 매우 험난한 길을 가고 있으며 일종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적·제도적 체제통합의 완료와 경제수준의 점진적인 개선은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유도하리라는 통일초기의 일반적인 예상은 서두에 언급한 경제부흥에 대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너무 안이한 낙관론에 근거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물질적 조건이 동독주민들의 불만의 중요한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것은 가령 체제인정도에서 실업자, 실직한 구동독 관료 등 통일피해자층의 비율이 통일수혜자층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 등에서 드러난다.⁶⁾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통합과정이 봉착하고 있는 난관의 핵심은 역시 동독주민들이 40년간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중앙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성해온 자신들의 소위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일시에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전환하는 데서 겪는 문화적·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여진다. 동

6) 동독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겪고 있는 '통일충격'은 일단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에서 유래함은 자명하다. 더 안락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에서 동독인들은 의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와 사회주의연합당을 선거로 거부했다. 그런데 동독인들이 가졌던 더 안락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기득자원에 새로운 자유와 소비가능성이 단지 더 추가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었다. 물론 동독인들도 구체제 수준의 완전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지금과 같은 정도로 자신들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의 와해과정이 진행되리라고는 예측하지는 못했다.

독인들의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의 준거틀 및 확실성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혹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자기변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독인의 수는 아직 소수이다. 또 일부분은 연령이나 구체제하에서의 위치 등 객관적이고 심리적 이유에서 변신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 와서 확인되는 사실은 동독주민의 상당수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변신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회주의적 인간형’ 및 사회체제의 강점을 다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⁷⁾

필자가 '95년 여름 동독 대학들을 순방하면서 만난 한 동독출신 대학생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막상 통일이 되어 자본주의적 사회를 접해보니 이 사회는 우리가 동독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자본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사회주의국가의 국정 교과서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 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약육강식의 사회, 빈부격차, 높은 범죄율, 실업, 물질만능주의, 사회적 연대의 부재, 인간관계의 피상성, 남녀차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호부재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학생은 동독시절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정부의 악의적 선전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조작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사회에 들어와 보니 교과서의 서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옳은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⁸⁾

7)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73%의 동독인들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능률은 없지만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 안정을 주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독인의 46%는 시장경제가 인간성과 배치된다고 믿으며, 독일사회에서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믿는 동독인의 비율은 64%에 달한다. 동독인들의 이러한 평가는 통일 독일의 체제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가 '90년에는 77%이던 것이 '96년에는 44%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8) 물론 필자는, 막상 철의 장막이 거처서 우리가 보게 된 사회주의 역시 우리

물론 이러한 거부적 자세는 이미 자본주의적 체제로 통일된 조건 하에서는 결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독인들의 위와 같은 자세는 지난 40년간 이들이 교육받아온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심리구조와 행위관행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인간형의 문제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제2의 근대성'을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그 이념의 실현과정에서 배태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모순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자명한 것은, 이러한 모순들의 창출과 함께 사회주의는 또 분명히 몇 가지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근대성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동독인들이 다시금 '동경하게 된' 사회주의체제하의 특정 측면들이며, 이것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 즉 '총체적 복지'와 '공동체적 연대'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사회주의에서 완벽히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많은 점에서 오히려 왜곡되었으며, 바로 이 두 가지가 현실 사회주의가 봉착했던 한계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두 가지가 체제원리 및 행위원리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평가한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주의적 제2의 근대성을 그 자체로서 전통성 혹은 비근대성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동독인들이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처해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사회주의적 인간

가 (반공적)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별 다를 바 없더라고 답하고는 서로 웃었다.

형'의 면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다시금 현실 사회주의가 근대화전략으로서 배태한 모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지면관계상 '사회주의적 인간형'에 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4. '사회주의적' 인간형

사회주의란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적 근대화과정이 야기시킨 일련의 심대한 위기현상들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구상된 대안적 근대화모델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정립한 사회주의이론은 '초기자본주의'가 노정한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수탈상황에 대한 지적·실천적 대안이었고,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혁명 및 이에 바탕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은 '고도자본주의'가 창출한 '대참사들' 가령 19세기말의 경제대공황,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후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발현은 자본주의의 극단적·파행적 발전의 결과로 태어난 독일 파시즘 및 2차세계대전이라는 또 한번의 대재앙에 대한 처절한 경험과 비극의 반복을 방지해야겠다는 당위적 욕구에 기초하고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권력·정치적인 요소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다는 희망은 사실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근거에 바탕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단적 합리성의 참혹한 승리, 혹은 정통 맑시스트적 표현을 쓰자면, 자본가치증식의 논리와 단순히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완벽한 조작가능성이 불려온 참혹한 승리에 대한 절망에 근거하고 있었다. 즉 전후 사회주의자들을 묶고 있던 반팃쇼주의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대참사의 반복에 대

한 불안들이 응집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스탈린주의가 자행한 만행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적 이념과 체제는 항상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과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지, 결코 '머리'로만 구상된 순수 이론은 아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는 매번 바로 이런 실천적 '대안'의 추구를 불가피하게 할만큼 엄청난 희생과 억압을 수반했다.

다시 말하여 마르크스든, 레닌이든 혹은 동구사회주의 건설자이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가 공히 추구한 것은 '더 나은 근대' 혹은 '진정한 근대' 내지 자본주의와는 '다른 근대'이었다. 최근의 동구변혁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적 '근대화모델'이 도달한 한계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근대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사회주의적 근대화가 좌절된 상황하에서 동구인들은 지금 거의 한결같이 자신들의 사회의 서구적 '재근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버마스(J. Habermas)는 동구변혁을 '만회성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Habermas, 1991), 쟁하스(P. Senghaas)의 경우 그것을 '구라파로의 회귀'라고 규정한다. (Senghaas, 1992) 흥미로운 것은 동구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고자' 갈망하는 서구문화권내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지금 서구적 근대성의 위기를 진단하며 그것의 극복을 주장하는 '탈근대주의'가 풍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성'은 현재 도마 위에 놓여져 '유일한 살 길'로 요리가 될지 '독을 품은 복어'로 버려질지 불안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사회주의가 추구한 근대화전략의 결과로 태어난 '사회주의적 인간형'은 어떤 모습을 띠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을 이념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는 ‘공동체적 연줄인간,’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적 신민’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인간이 ‘관료적 신민’이라는 규정을 동독주민들은 꾀박 속에서 신음한 ‘불행한 국민’들이었으며, 정치적 억압과 감시때문에만 그 당시 체제에 순응하고 충성했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앞장에서 서술한 최근의 구동독 내지 사회주의에 대한 ‘노스탈지아’ 경향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제재들, 즉 비밀경찰국가의 명시적인 억압 등이 동독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확보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던 동독사회의 내적인 통합에 있어서 위의 부정적인 요인들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은 동독정권이 국민 전체 및 일부 특권층에게 제공했던 긍정적인 보상들이었다.(Offe, 1994)

이러한 온정주의적 정권이 활용한 처벌, 유보, 보상 및 일반적인 보장들 - 여기에는 매우 제한된 정도에서나마 사적인 틈바구니와 자유재량영역도 포함된다 - 은 널리 퍼져있던 사회정의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념에 상응하는 것이었던 것이 분명한 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독사회의 주목할만한 내적인 안정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충성심을 설명할 수가 없다. 실제로 '53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동독에서는 엘리트층에서도 대중편에서도 주목할만한 체제저항운동은 거의 없었다. 즉 이들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로 인해 ‘신민적’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복지관료적’ 보호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때, 동독국가는 하나의 정부보조체제, 분배의 체제, 그리고 사회보장체제였는 바, 이 체제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층 아래선

부터는 개인이 큰 이득을 볼 가능성도 없었지만, 그 대신 만약 반국가적 행동을 하지만 앓는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공동체적 연줄인간'과 '관료적 신민'이라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각인시켰던 것이다. 이제 이 인간형이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변신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5. '공동체적 연줄인간'에서 '개인주의적 시장인간'으로

공동체적 그물망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관계망의 의미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순수히 기능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는 바, 왜냐하면 이 망에서 사회적 교환,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통제와 집단적 행위규범의 정립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망은 통일과 함께 급속히 그 중요성과 연결력을 상실했고 노동현장에서나 혹은 다른 생활영역에서도 개인주의화의 경향이 명백히 드러나며 사회적 원자화가 전면에 나타난다.(Lindig, 1993) 그리고 소비영역 및 물자공급의 영역에서도 이미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희소자원의 조달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그물망은 점차 시장특유의 조정매체에 의해 대체된다. 가장 중요한 조정매체들은 이제 경쟁, 화폐 및 개별화된 소비양태들이다. 즉 동동지역주민들은 지금 연줄윤리에 의거한 공동체적 인간에서 업적윤리와 영리윤리에 구속되는 개인주의적 시장인간으로 변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버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갑작스

러운 구조적 근대화의 충격은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근대적 경제윤리와 행위양식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 두 가지 변수, 즉 물질적·제도적 근대화와 내면적·윤리적 근대화간에는 근본적 괴리가 있는가? 만약 후자가 옳다면 이 괴리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동독의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결국 중단 내지 적어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괴리가 상당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물론 베버의 분석대상은 근세초 서구에서 진행된, '전통적 인간'에서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의 변신이었지만, 베버가 상기한 변신에 필요하다고 전제한 '내적' 그리고 '외적' 보상요인이 동독주민들에게는 거의 결핍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적 보상요인이란, 예를 들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순수히 사적인 행복추구 혹은 자기실현, 집단적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적 열정 등일 것이다. 이것은 베버가 그의 「신교윤리」에서 초기 프로테스탄트 부르조아계층에서 작용했다고 가정한 종교적 구원동기의 세속화된 형태들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구원'의 동기가 동독국민에게는 앞에서 서술한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요인들, 즉 공동체 지향성, 이등국민으로서의 열등감과 멸시, 동독재건에서의 배제 및 '신독일'과의 동일화의 거부 등으로 인해 매우 약하게 개발되어 있다. '외적' 보상요인이란 물론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는 바, 이것 역시 앞장에서 보았듯이 단기적으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문제의 구체적 상황중 하나가 실업상황이다. 실업은 한편으로는 절박하게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의 변신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신에 필요한 내적·외적 보상요인을 박탈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적 실업 뿐 아니라 향존하는 실업가능성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은폐실업자와 단축노동자를 합하면 전체실업률은 실제로 약 30%에 달하며 여성과 50대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70~80%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계층은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40대이상 중에는 일부분만이 새로운 서비스내지 제조업 등에서 제2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젊은 취업·근로자층은 새로운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고숙련공의 상당부분은 서독으로의 이주를 택하고 있다.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층은 과연 직업훈련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그 분야에서 나중에 일자리를 얻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이 전환은 동독에서 일련의 '버림받은 세대들'을 창출한다.(Kretzschmar, 1993)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높고 지속적인 실업률에는 동독지역의 폭발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동독의 실업상황은 이러한 양적인 측면외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은 실업의 영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1) 동독주민들은 실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 완전고용은⁹⁾ - 물론 그 대가는 경제적 비효율성

9) 구체제에서는 헌법이 국민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동시에 일종의 종신고용의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었다. 더구나 구체제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 낮은 노동생산성수준, 엄청난 관료행정조직 및 통제기구(비밀경찰 등)의 규모로 인해 '제조업'내에서는 항상 노동력부족 현상이 있었다. 동독의 생활수준이 실제로 많은 관점에서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장과 수입의 안정성으로 인해 동독인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계산가능'했고 '개팔가능'한 삶을 영위했다. 누구도 소위 인생의 우여곡절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동독인들의 생활감각과 사회적 안정감을 결정했다. 재교육, 직업교육, 병원, 유치원, 유아원, 청소년 휴양소, 일반인들의 휴가장소, 주택분양 마저도 동독에서는 전부 개개 기업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서의 직장은 동시에 노동의 재생산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의 확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업이란 동독인에게는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었지만 - 동독정권의 공언된, 그리고 실천된 목표였고, 이것이 그 정권의 부분적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였다. (2) 동독인들은 효과적인 도움은 '밖에서'(즉 서독에서) 그리고 '위에서'(즉 연방정부)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이러한 '외부' 및 '위'에 대한 의존성은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요구수준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기적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조장하는 바, 그 결과 경제 재건을 위한 자발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집단적 노력은 동독주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3) 그리고 설사 동독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이 노력은 일종의 '구명선의 경제' 논리를 따른다. 즉 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탈출구 - 가령 이주, 원거리 통근, 재교육 등 - 를 개별적으로 찾는 바, 이것의 결과는 지금까지 동독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가혹한 기회불평등상황이다. 즉 연령, 지역, 성별, 가족상황, 자녀수, 전문자격 등에 따른 극도의 불평등현상이다. 이러한 불평등현상은 다시금 이익대변을 위한 집단행동의 해체를 가져오며, 이것은 다시금 기회주의, 갈등회피, 악조건감수 등의 경향을 강화시킨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된 동독국민들의 정치적·문화적 속성들, 즉 집단행동과 저항에 대한 경험부재(관료적 신민) 혹은 사회보장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 등의 속성과 방금 이야기한 실업상황의 양적·질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면 동독지역의 경제적·정치적 갈등의 전개양상에 대해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갈등은 관여자들의 행위양식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즉 (1) 개별적 (2) 집단적 (3) 법치국가가 규정한 제도적 (4) 비제도적 행위 (Offe, 1994)이다. 이 형태들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 행위양식들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경험적·양적 전망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근거로 우리는 여기서 제시된 갈등유형들의 빈도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차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있다. 이 순차표는 일종의 중간전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선 '집단적·비제도적' 갈등의 형태로는 사회운동, 공장점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90년 중반 이래 거의 전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했다. 즉 단지 '89년 가을과 겨울만이 동독사회는 '활기찬 새출발의 사회'였지, 오늘날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희망이 좌절되고 체념한 사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사 저항운동이 있어도 그것은 소규모이거나 거의 동원력이 없는 운동이다.(Offe, 1994)

그 다음 '집단적·제도적' 갈등형태로는 노동조합, 정당, 선거를 통한 조직화된 행동을 생각할 수 있다. 정당, 노동조합, 교회, 의료보험, 직능대표조직, 상공회의소 등 서독의 모든 '조합주의적' 제도체제가 동독에 이식되었으나, 이 제도들이 원만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토대가 동독에서는 부재했다. 그 결과 이런 제도들은 동독사회의 특수한 과도기적 갈등을 소화해내는 데는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모든 조직들이 서독에 있는 본부의 통제하에 있다. 가령 노동조합 가입률은 동독이 이미 서독을 능가했으나 파업이나 시위를 위한 이 조합들의 동원력은 극히 미미하다. 즉 아직까지도 동독사회는 집단적인 갈등소화를 위해 효과적인 기제들을 가지지 못한 '탈 조직화된 사회'로 간주되어야 한다.(Offe, 1994)

끝으로 '개별적·비제도적' 저항형태로는 아노미, 자살, 정치적 폭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유형의 개별적, 비제도적이고, 흔히 비합법적·병리적인 행동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체육행사장 혹은 가정에서의 폭력, 외국인에 대한 폭력, 절도 등은 깊은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 외에 가령 이민 등 노동시장에서의 개별적인 적응전략이 물론 갈등과 위기상황과 좌절을 소화해내는 가장 흔한 실천방식이다. 그래서 아마도 동독사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목에 성공하는 약한 다수와 강력한 소수의 패배자'의 사회로 분열될 뿐 아니라, 이것은 다시금 하나의 '연대적'인 사회의 건설을 방해하는 제경향들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Offe, 1994)

물론 동독에서도 이제 서서히 비록 아직 매우 소수이지만,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의 변신에 성공하여 사경제적·기업가적 이니셔티브를 습득한 계층이 형성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형들이 사회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구체제에서도 중견관리층으로서 경제부서에서 실무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들 중의 다수는 중소기업가로 일단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동서독의 많은 학자들은 동독부흥의 주체가 신창업자층이며 이들이 동부독일의 시장경제적 근대화의 주도세력이라고 주장한다.(Lindig 1993)

이러한 가정은 서독 및 서유럽의 다양한 경험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서유럽에서는 '70년대 이래 중소기업들이 선진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적·기술적 근대화의 각별히 융통성있는 담지자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동독의 깊은 적응위기하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해 산업화의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지라는 문제는 매우 높은 학문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독일 전체경제의 현실적인 제조조건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영업자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해야 할 사회·문화적 전제조건, 특히 시장경제적 행위성향의 존재 내지 동원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독창업자들의 다수는 이미 동독시절에 이런 창업의 꿈을 가졌고, 또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가졌던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시장경제적 행위성향의 습득에는 심리적 장애를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가령 많은 동독창업자들은 지불되지 않은 계산서들을 강제로 수급하는 것을 아직도 꺼리며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만 아래와 같은 새로운 ‘인식’들을 엿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모두 자기자신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혹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 내지 적대하여 사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아직 사회주의시절의 사고 및 행위관행이 남아있다. 가령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것을 매우 꺼리며, 팀워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창업은 주로 택시회사, 보험회사, 육자, 통신판매회사 판매원 등 대인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며 대부분 10명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소기업들이다. 그에 반해 제조업 등 창업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이런 창업가층 형성이 매우 미미하다. 물론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90년초 이래 자영업창업자군이 미약하게나마 역동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Kretzschmar,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독지역 주민들은 ‘공동체적 연줄인간’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중 연줄인간이기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있지만 공동체적 지향에만은 여전히 강하게 집착하면서, 이것의 이기주의적 시장인간성으로의 대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6. 복지관료적 '신민'에서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동독은 지금까지 말하자면 '국유화'된 사회였는 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좁은 스펙트럼의 이해갈등 및 가치갈등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협회나 조합 등과 같은 '시민 사회'의 자율적 결사체 형성이 없었다. 통일 이후에 점차 분명해 진 것은 동독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항상 불리하고 미숙한 대변자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장에서 서술한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정치적 측면, 즉 '관료적 신민'으로서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조직구성을 통해 진행되는 결사체적 재편성이 동독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는 동시에 '집단화'를 의미한다. 즉 대변되는 모든 이해관계는 집단행동의 형식조직화를 통해 대변되며,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는 정치적·사회적 집단행위자들의 대외적인 대변과 대내적인 결속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재된다.(Neckel, 1993)

동서독 통일의 외적 과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단은 서독의 조직 및 조합체제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흡수통일 과정의 특수성은 동독의 자생적인, 그리고 현지에 이미 존재하거나 거기서 새로이 형성되는 어떤 구성체들에게도 존립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민주사회주의 당과 시민운동 일부 정도일 뿐이다. 즉 정당, 노동조합, 산업 및 농업관련 협회들과 경영자협회, 직업조직들, 상공회의소들, 교회, 각종 친목협회들, 복지조직들, 학술조직, 체육조직들은 숨막히게 급속히 진행되는 제도적 재편성 과정에서 모두 상응하는 서독의 기존조직들의 모델에 따라 모방되고 재조직되고 있다. 그러나 구서독에서는 이

미 정착되었던 결사체적인 구조들이 동독의 사회문화적인 토양아래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서독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임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제도들이 진정으로 내실있게 되려면, 이 제도들은 각각 그 조직에 관여된 사람들로부터 이 조직이나 제도가 의미있고 적절한 장치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즉 이 제도들은 전통, 관행, 경험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것들은 제도의 설립과 함께 자동적으로 함께 배달되는 것은 아니다.(Offe, 1994)

집단행위의 모든 형식조직의 밑에는 비형식적 사회적·문화적 구조라는 토대가 깔려있는 바, 이 토대는 형식조직 그 자체만큼 쉽게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동독에는 집단행위의 제도들의 이러한 비형식적 토대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독국민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태도, 그리고 통일 이후 이들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토대의 형성이 방해를 받고 있다. “선박은 충분한 깊이가 있는 물에서만 항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동독이라는 해상에 띄워진 서독의 선박들은 거기서 좌초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라는 오페의 말은 이를 잘 시사하고 있다.(Offe, 1994: 46)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관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1) 통일과정의 속도 및 그 부대상황들은 동독의 사회적 상황의 엄청난 유동화, 개별화, 불안정화 및 탈제도화를 초래했다. 즉 이제 모두가 자신의 행복은 전적으로 자신만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은 몸에 익은 전통과 사회적 조직들과 사회적 이해관계 대변을 통해 중재되었던 일상적 공동행위가 가진 생산력이 이제 와해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도 국유화

되어있던 이익대변 조직들은 그들의 온정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과 냉소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시민운동이 이제 주변화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가치나 확신 그리고 이해관계의 집단적인 대변이라는 발상은 동독국민들간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대변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자격이나 관행도 부재하다.

(2) 동독의 '시민사회'의 틀내에서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이익대변 세력의 형성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을 들자면 동독주민들이 노동조합, 협회, 지역자치제 등을 통한 연대행동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영역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수도인 본(Bonn)에서 수립되는 정책의 단순한 수동적 수혜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독국민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 즉 실업자, 여성, 가족의 경우는 자체로 조직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최소한 정치사회적 지배조직내에서의 위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주변집단' 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집단행동을 통해 전진하는 사회를 자율적으로 재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주의체제의 파산체를 자신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하나의 정치적·경제적 체제에 맡기고 '손을 터는 것'이다. 이것이 상기한 예측상황이 동독인들에게 강요하는 행위지침이다.(Offe, 1994)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비형식적' 토대의 형성은 구동독에서 일견 서로 상반되는 이유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즉 한편으로는 동독사회가 개별적인 원자로 해체되어 버렸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에의 가입을 통해 공동으로 처하게 된

각종의 위기상황들은 단지 '외부'의 힘을 빌려서만 개선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금 독자적인 자발조직을 구성할 의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이식된 서독 제도들의 조직세포가 동독에서는 사회문화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동독인들의 자의식 회복 경향과 더불어 특히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동독인들의 점증하는 비판적 태도 역시 이러한 거부반응의 징조들이다. '90년 이래의 경험조사는 동독에서 민주적인 재건작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용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다원주의적 정당제도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1) 정당,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간헐적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용의는 '91년에 24%에서 '93년에는 13%로 하락했다. 즉 적극적 정치참여 잠재력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2) 다원주의적인 정당체제하에서의 삶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90년의 90%에서 '93년에는 43%로 급감했으며, '덜 중요하다' 내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90년 2.4%에서 '93년에는 31.2%로 증가했다.(Misselwitz, 1994)

그에 반해 정치적 냉소주의와 체념은 점차 확산된다. 가령 "옛 체제에서와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사람들을 조여 매는 끈이 다를 뿐이다. 돈, 부채, 세금문제, 법률들의 혼란스러운 숲, 즉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Berg, 1993)라는 어느 성공한 동독기업가의 견해는 결코 소수의 견해만은 아니다. (3) 통일 후 몇년 사이에 모든 정당들은 상당한 당원상실을 감수해야만 했고 정

치기피증 내지 혐오증 및 정치인과 정당의 신용상실은 심각한 정도이다. 5명중 4명의 동독인이 기존의 서독정당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거나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Berg, 1993) 그래서 '비투표자'층이 가장 큰 '정당'이라는 말은 그렇게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경향을 단순히 구체제의 유산이나 권위주의적 의식의 잔재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은 이같은 경향이 '90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90년 동독의 여론과 선거에서 동독인들은 서독의 정치적 가치관과 제도들을 기꺼이 수용하였지만, 그 이후 그들은 이 수용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치적 보상과 조직상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독에서 성공한 제도와 규범체제 및 조직형태들의 이전은 외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이것은 동독인들의 여론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형성에 중대한 방해물이 되었다. 동독행정조직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은 서독에서 수입된 인사들에 의해 점유당하고 있는 바, 동독인들은 이들을 서독의 이해관계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카르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정치적·행정적 영역에서 서독 엘리트들의 지배현상은 동독에서 매우 깊은 반서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동독인들의 다수는 서독이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현재 동독의 위기상황의 원인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서독에 의한 식민지화라는 표어는 단순히 하나의 해석 도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들의 집단적인 무력감과 이 무력감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역설적인 시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Offe, 1994)

통일 7년째인 오늘날 확실한 것은 체제전환의 경제적 비용,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문제의 깊이 등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 못지 않게 체제전환의 진정한 장기적인 문제가 천문학적인 재정적 비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 전환의 사회구조적인 결과와 그것이 가진 정치적인 의미라는 사실이다. 서독의 헌법이 단번에 전동독지역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동독의 사회적인 재편의 틀과 한계가 미리 정해져 버렸고, 또 소수집단이라는 위상때문에 동독인들은 이 틀과 경계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민과정'과 비교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물론 이것을 수반하는 심리적인 결과들도 포함된다. 서구적 기준들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적 자본의 평가절하 뿐 아니라, 동시에 문화적·사회적 자본도 평가절하시켰다. 다시 말하면 동독 특유의 소유구조, 직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해체 및 이를 통한 능력 및 위상상실의 경험들은 이제 범치국가가 가져다 준 자유획득과 서로 견주어지고 상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서독 법체계에 대해 전적으로 혹은 많은 신뢰를 가진 동독인은 '93년에 11%정도이고, 매우 적은 신뢰 내지 전혀 신뢰를 가지지 못한 동독인이 무려 42%에 달한다.(Messelwitz, 1994) 이러한 신뢰상실의 하나의 계기는 '과거청산'문제였다. 서독의 범치국가적 기준에 의하면 동독은 소위 '불법국가'였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동독체제에 관여하였던 모든 정치적 엘리트들은 일단 범범자 및 공모자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다시금 엘리트교체를 위해 필요한 정당화근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실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범치국가는 비일관적이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고, 이것은 범치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입힌다. 베르벨

보레이(Baerbel Bohley)의 “우리는 정의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법치국가일 뿐이다”라는 말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가령 동독정권하의 공무원 100만명에 대한 재고용 심사과정에서 수많은 선별적 편견적 판결이 내려졌고 이것은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Strohschneider, 1996)

동독은 7년이래 이제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매우 큰 정치·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동서독인에게 이 역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분단은 계속된다. 물론 이 말이 통일이라는 목적이 빛나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동독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40년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건설적인 학습과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하여, 동독에서는 지금 집단적 자기정체성이 재활성화되고 있고 ‘낙인찍힌 자들’의 집단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서독의 가치와 해석에 대해 동독인들의 주목할만한 저항에서 나타난다. 가령 다수의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구체제에서의 삶을 전적으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체제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개인적 삶에서 확보했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가령 동독제품의 의도적인 평가절상에서도 나타난다. 즉 서독에서는 아직도 맹목적인 동화를 동독인들에게서 기대하지만, 동독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맹목적인 수용’에서 ‘점진적인 변혁’쪽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혁은 기존의 구조와 행위양식들을 유지하고 파괴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3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욕구가 정치적으로도 조직화될 수 있다는 첫 조짐이 앞에서 분석한 '94년의 총선결과이다.

통일을 통해 동독의 역사는 이제 다시 독일의 공통된 역사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 이상 중요한 것은 동서독 양 사회의 역사적 출발점의 공통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다. 이 출발점은 히틀러와 파시즘이었다. 그리고 내적인 사회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동독의 역사를 그 끝에서 부터가 아니라 바로 상기한 히틀러-파시즘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작에서 부터 읽는 것이다.(Senghaas 1992)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서독인들은 히틀러 체제하의 전체주의적 신민과 동독의 복지관료적 신민사이에는 얼마나 중요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결국 사회주의가 그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성취한 ‘근대화’의 업적이라는 것을 아마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시에 동독인들은 형식민주주의하의 ‘시민’이 그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성취한 값진 업적이라는 것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양국민은 지난 40년간 각자가 따로 추구한 근대화전략이 그 어느 쪽도 전체로서 파기되어 버려야 하거나 파기될 수 있는 부정체가 아니라, 역사적 대재앙에 대한 공통체험에서 출발한 서로 다른 근대성이념의 발현이었음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또 지금의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서독의 사회통합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 모델을 구상한다면, 이 모델은 아마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1) 동독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변혁, (2) 서독의 자성적 근대화, (3) 하나의 새로운 통합단위로서의 독일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모델은 통일을 양사회가 다함께 겪는 하나의 학습 및 개혁의 과정으로 보면서 통일이 독일국민의 대화합 및 제2의 건국의 기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통일은

단순히 동독의 '뒤늦은(만회성) 근대화'를 뜻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서독의 경직된 사회구조들의 개혁의 기회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도적인 관점은 양사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상호의 강점의 최대한의 활용만이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관점이다. '94년 10월 통일 4주년을 기념하여 정계와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포츠담에 모여 독일통일과정에 대한 원탁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아래와 같은 「통일정책의 포츠담 대원칙」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독일의 통일을 서독의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그대로 동독에 이식함으로써 도달하려고 하였던 잘못된 시도는 매우 어렵고 모순에 찬 과정을 야기시켰다. 이 과정에는 정치적 성공과 실패, 인간들의 실망이 뒤섞여 있다. 점점 더 분명해 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에는 통합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집단들간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그런 체계적인 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신연방주들을 구서독에 일방적으로 통합 내지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공동의 목표는 두 나라에서 각각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하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안정되고 활발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양 지역 주민들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 이 새로운 사회건설에 각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남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함의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각 부분영역에서의 구체적 통일정책 내지 통일대비책의 정립이라는 차원과 총체적인 통일모델의 기본성격의 규정과 목표설정의 차원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이 가진 역사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제조건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바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통합위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편적인 교훈들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도의 이식은 그 제도 뒤에 숨은 '인간'에 대한 고려없이 성공할 수 없다. 둘째, 북한주민의 주체적·자발적 개혁역량의 활성화 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통일'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현재 독일 통합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구 서독이 이 두 가지 관점을 통일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독은 통일과정에서 동독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 잠재력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1,600만 동독국민들은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일종의 '집단마비증'을 앓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마비증은 한번 걸리면 그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독일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독일정부가 뒤늦게나마 신문·방송 등의 매체나 공보처를 직접 동원해 동독국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및 교육시책을 펴면서 이 마비증의 해소 내지 경감을 시

도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단체들 역시 헌신적으로 '인간통합'을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험적 조사가 보여주듯이 이런 조치들의 효과는 미미하며 적지 않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지난 7년간 동독국민들의 집단적 자기비하는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독일은 지금 '수단'이 '목적'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통일'은 '인간통합'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이 수단이 지금 '인간분열'과 사회해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독일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사회통합 내지 인간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 품에 안을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온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자기존엄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가졌고 또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삶의 방식에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 진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요구이다. 가령 인간을 근본적으로 '경제적 존재'로 보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가진 합리성과 가치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보는 사회주의적 삶의 양식이 가진 합리성과 가치를 결코 무조건적으로 능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배버적 의미에서 「문화인간」, 즉 스스로 가치를 추구하며 창출해 내고 이 가치를 수호하려는 존재이다. 동독인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신들 고유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창출했으며 이 가치들 중에는 귀한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동독인들의 자기정체성의 기둥인 이 가치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한 동서독

의 사회통합은 영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진정한 통합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간에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구상이 취해야 할 기본방향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이 기본방향을 앞장에서 언급한 모델에서 독일의 자리에 한국을 대입하여 표현하자면, (1) 북한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변혁, (2) 남한의 자성적 근대화, (3) 하나의 새로운 통합단위로서 한국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북한주민의 자체적 개혁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남북접근의 기회와 국제정치적 재량공간을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이라는 수단과 '인간통합'이라는 목적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공상적' 통일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제2의 건국론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외세'로 여기는 역설적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의 논리에 바탕한 일방적 '체제통일'이 오히려 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통합'을 파괴하는 역설을 낳은 독일의 과오를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통일과정에서 어느 집단도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남북한이 제2의 건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될 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

한반도는 근세에 들어와 인류가 시도한 두 가지 근대화전략,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동시에 한반도는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사회주의도 최소한 망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성공한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적 기초를 다지지 않고,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회복할 의지가 없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추구될 가치가 없으며, 민주적·경제적 개방과 개혁이 없는 사회주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경험적 진실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와 개혁된 사회주의를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상 어느 곳도 가지지 못한 새로운 문명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2의 건국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제2의 건국은 동시에 제3의 근대성을 창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근대성만도, 사회주의적 근대성만도 아닌 제3의 근대성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새나라'의 모습은 「민주공동체적 복지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주'는 보편성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당관료의 독재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보완하는 원리이며, '공동체적'이란 동양문화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바, 단순히 더불어 사는 조직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개인주의적 이익사회라는 서구 자본주의적인 근대성을 보완하는 원리이다. 끝으로 '사회복지'란 가능한 최대의 분배정의를 지향하는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제2의 건국이념을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의 자기혁신의 방향은 분명히 드러난다. 남한은 민주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지만 사회복지국가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요원한 길을 가야 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인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지금 거의 해체단계에 와 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사회복지국가적 기반은 어느 정도 다졌고, 이것은 강한 공동체지향적 이념에 바탕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

울성과 생산성은 최악의 상황에 있으며 가장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라는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전체주의국가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은 둘다 공히 '부실국가'이다. 따라서 각각 자신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인정하고 제2의 건국이념의 방향으로 자기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변신의 자세는 자신들의 기존의 체제원리 그 자체의 일정부분도 재고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의 부실의 성격과 정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남한은 이러한 자기변신을 위한 물질·이념적 자원을 훨씬 풍부히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라는 부실국가는 그 시공이 잘못이었던 관리가 잘못이었든간에 붕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붕괴를 막아야 하고 또 막을 수 있다. 북한 붕괴위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마샬플랜'과 같은 대규모적이고 집중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조에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덕의 논리가 깔려 있어야 한다. 실상, 우리 민족은 고구려시대를 끝으로 천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주변에 의해 자존과 자결의 권리를 유린당해 온 민족이다. 행여 남북한이 한서린 우리 역사의 전철을 서로 되풀이 하려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상기한 '마샬 플랜'의 대전제는 북한의 자기개혁 및 동반자적 협력의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러한 의지 형성의 대전제는 다시금 남한에 대한 신뢰이고, 우리의 북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남북한관계발전의 중착점이 '너'만도 '나'만도 아닌 '우리'라는 제2의 '민주공동체적 사회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필

요로 하는 것은 제2의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공상적' 통일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버(Max Weber)의 말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가능한 것마저도 이룩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전성우, 1990.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
- Berg, Frank. 1993. “Umbruch zur Demokratie”, in: Reißig.
- Giesen, Bernd. 1991. Experiment Vereinigung, Berlin.
- Glaeßner, Gert. 1991. Das Ende eines Experiments, Berlin.
- Habermas, Jürgen. 1991.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 Koch, Thomas. 1993. “Die Ostdeutschen zwischen Einheitschock und doppeltem Zukunftshorizont”, in: Reißig.
- Kogel, J. 1993. Neues Deutschland, Frankfurt Kretzschmar, Albrecht. 1993. “Massenarbeitslosigkeit”, in: Reißig.
- Lindig, Dieter. 1993. “Die neuen Selbständigen”, in: Reißig.
- Marx-Engels. 1966. Studienausgabe I-II, Frankfurt Misselwitz, Hans. 1994. Politikwahrnehmung und Politikvermitt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Das Parlament, 45.
- Neckel, Sieghard. 1993. “Deutsche Abgrenzungskämpfe”, in: Reißig.
- Offe, Claus. 1991. “Das Dilemma der Gleichzeitigkeit”, in: Merkur 4/1991.
- 1994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Frankfurt.
- Priewe, Jan. 1991. Der Preis der Freiheit, Frankfurt.
- Reißig, Rolf. 1993. Rückweg in die Zukunft, Campus.
- Senghaas, Dieter. 1992. Europa 2000, Frankfurt.
- Strohschneider, Stefan(ed.), 1996. Denken in Deutschland, Bern.
- Weber, Max. 1921.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II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장 경 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서 론

등소평 사후의 중국은 모택동 사후와는 달리 정치·사회·경제적 질서와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등소평이 정한 국가지도자 강택민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력 유지에 성공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의 국가 발전전략, 즉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대중적 동의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최근 등소평사상을 모택동사상과 마찬가지로의 최고 지도이념으로서 선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념적·정책적 연속성과 전반적인 경제성장세의 이면에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되어 왔다는 지적을 빠뜨릴 수 없다.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특히 경제체제 개혁은 한편으로 개혁지도부조차 예상치 못했던 경제성장과 소득향상 덕분에 지속될 수 있었

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저항과 분열에 따른 완급조절이 불가피했다. 특히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건, 1990년대 들어 빈발하는 각지의 농민반란 등은 중국의 개혁노선이 전반적인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중국 개혁정책의 지속성은 경제지표상의 성공과는 별개로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사회(재)통합적인 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개혁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동요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평등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하게 붕괴된 데 기인한다. 개혁이 사회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환하고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인 이상 사회주의적 평등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지 모른다. 나아가 불평등의 발생이 반드시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전체 인민복지와 국가경제의 향상을 견인하는 ‘자격 있는 부유계급(qualified rich class)’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소평은 이미 1978년에 “일부 지역, 기업, 노동자, 농민이 근면한 자세와 효율적인 경영에 기초해 먼저 높은 소득을 올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선부(先富)용인론을 제기했다.¹⁾ 등소평은 이후의 개혁과정에서 특히 지역간 빈부격차의 심화가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에도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여건이 좋아) 먼저 발전한 지역은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함께 부유해진다”라며 선부의 사회 전체적 기여를 강조했다.²⁾

이같은 등소평의 입장이 기층 인민들의 현실 생활에서 그다지 호

1) 鄧小平, 『鄧小平文選, 1974-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 142.

2) 鄧小平, 『鄧小平文選 Ⅲ』,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374.

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데 현대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수많은 인민들은 그들이 처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비민주적 작용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된 간부들이나 국가기구의 감시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미 인민들의 대다수가 사유·사영경제에 몸담고 있거나 시장경제를 지향해 활동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국가권력에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을 결부시켜 이해하고 그 정점에 국가권력을 두고 보는 것은 여전히 권력 독점을 고집하고 있는 공산당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개혁기 중국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을 적용하여 체계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력(access to state power)'에 따라 계급적 지위 및 관계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중국에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이 각 부문에서 시장원리의 도입 여부, 범위, 방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화의 양태에 따라 각 사회집단의 계급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좌우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각각의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을 활용해 시장화의 과정을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함으로써 '편파적 시장화(partial marketization)'가 야기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명제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야기된 편파적 시장화의 결과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회집단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의 속성이나 그 속에서 접하는 부유계층, 고용주 등의 행위의 결과로 해석하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국가기구나 간부들의 행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문제가 파생한다고 보는 것이

또 다른 기본 명제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중국의 개혁을 기본적 사회질서 재편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당면한 사회적 저항과 분열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 중국식의 실용주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지속성은 당장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체제 변화에 수반된 사회적 갈등과 동요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인의 분석이 북한의 앞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의 개혁과 사회질서: 편파적 시장화와 국가권력에의 접근력³⁾

중국의 체제개혁은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지향점을 명시화했으나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그 특성과 방향이 바뀌어 왔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들에서 폭발적인 정치적 변혁에 수반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전개된 것과 비교하면 중국에서는 주로 경제영역에 국한해 매우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정책 및 제도 변화가 시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미시적 수준에서 각종 생산조직들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소유를 다원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거시적 수준에서 소비재, 생산재, 노동력, 기업소유권, 금융, 그리고 교육·의료·복지서비스 등의 원활한 시장거래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추구되어 온 중국의 개혁은 가장 성공적인 탈사회주의적 발전 사례로 꼽히고 있지

3) 이 절의 이론적 논의와 다음 절의 경험적 설명은 「성곡논총」 1997년호에 발표될 필자의 별도 논문 “개혁기 중국 계급구조 변화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함의” 참조.

만 그 결과는 산업별, 지역별, 정책영역별로 판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체제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30여년의 꾸준한 실험을 거친 집단농업이었다. 1970년대 말까지 10억 인구의 80%가 여전히 농촌에서 집체농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 들어 이들의 생산 조직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더러는 중앙의 국가정책으로서 더러는 농민들 자신의 의지로서 추진되었다. 특히 생산조직의 탈집단화(가족단위 사영농업의 부활), 농산물 국가수매가의 대대적 인상, 지역 농수산물 시장의 확산 등의 변화는 각각 혹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을 눈부시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농업부문의 발전은 현저히 둔화되고, 그 대신 엄청난 규모의 농촌 유희노동력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소비재 공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이후의 경제성장세를 좌우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도시지역의 국가산업은 생산체제 개혁의 측면에서나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국가기업들의 적자를 보전하거나 도시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데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일부 부문의 국가기업들이 그 동안의 경영개혁 등의 효과로 생산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 국가산업은 인민경제의 발전에 여전히 결정적인 점이 되고 있다.

중국 개혁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개혁의 실제 내용과 과정이 사전에 국가에 의해 종합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었다. 개혁은 실용주의 국가(당)지도부와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상호작용이 민감하게 반영된 일련의 시행착오 및 보완의 과정이었다.

둘째, 시장거래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market transactions)가 관료제적 경제계획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활동의 거시적 조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 진척됨에 따라 국가의 권위와 역할은 이제 경제활동과 자원의 관료제적 통제를 통해서 뿐 아니라 시장기제의 작용 자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기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은 관료제와 시장을 동시에 통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두 가지 경향이 합해져 나타난 현상이 일종의 '부분적으로 시장화된 경제체제'(partially marketized economic system)로, 여기에서는 상품, 서비스, 노동에 대한 시장화의 정도와 방향이 다양한 사회집단들 및 개인들의 상호 경쟁하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혁기에 들어 국가가 계급간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계급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이 경제체제 전반의 완전한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개혁기의 시장사회주의는 시장화(marketization), 혹은 국가간섭의 철회(withdrawal of state intervention)가 다양한 산업, 지역, 직업 사이에 불균등하게 추구하고 실현되는 부분적 시장화 혹은 탈국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계급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불균형적' 혹은 '편파적' 시장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시장화는 잔존하는 사회주의적 제도들의 정치·경제적 효용을 일거에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국가지도부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거시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⁴⁾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부분적 시장화는 국가(당)가 국가기업의 노동자,

4) 린이푸 외, 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서울: 백산서당, 1996) 참조.

각급 당·정간부 등 국가 의존적 집단들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는 과거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한편, 농민, 이농노동자 등 시장화된 부문에 속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하도록 방치하고 국가의 경제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는 일종의 차별적 우대주의(favoritism)로 귀결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시장화의 결과로 특정 집단이 새로운 생산활동과 많은 이윤 축적의 기회를 맞는 반면에 관료제적 통제에 놓인 여타 집단들은 경제적 곤궁을 극복할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우대집단들은 오히려 시장화된 부문에 진출해 있을 것이다.

부분적 시장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개인들 사이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시장화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사회집단 및 개인이 계급적 이익을 제대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고 시장원리의 도입 혹은 배제를 위해 관련된 국가 조직이나 간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 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각 사회집단의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력(access to state power)'이 계급관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된다.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은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채택한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의 핵심 개념이다.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은 계급관계를 국가권력과 분리된 사회집단(계급)들 사이의 상호 역학관계로 보지 않고 계급적 위계나 지배가 각 사회집단의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됨을 강조한다.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등화나 불평등한 교환관계가 있다면, 이것이 각 사회집단별로 처한 객관적인 물질 여건(objective material conditions)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인위

적 작용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각 사회집단에 대해 경제활동의 내용과 방향 설정, 각종 생산 요소의 할당 및 기반시설의 공급, 재산권 행사의 방식과 범위 조정, 정치적 조직화의 유도나 통제 등의 세세한 간섭과 통제를 실시할 때, 각 사회집단의 객관적인 물질 여건이란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에 의해 가중(weighting)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⁵⁾

그런데 계급관계에 있어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의 중요성은 비단 개혁기에 들어서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개혁 이전, 나아가 전통사회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시대 중국에서 사회집단들이나 개인들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나 영향력을 얻으려는 행동은 정치적 혹은 도덕적 비난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⁶⁾ 사회주의 시대에 들어서도 계급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회집단들 사이의 상호 경쟁과 갈등으로 중국은 매우 활발한 조합주의

5) 이같은 문제의식에 가장 근접한 논의를 제기한 학자는 올손(Mancur Olson)이다. 올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자원의 사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는 사회집단들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구성원의 수가 적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일사불란한 대정부 및 대회의 로비를 펼칠 수 있는 사기업가들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수학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개혁기 중국에서의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은 올손이 강조하는 당장의 사회생태적 조건(social ecological conditions)보다는 개혁 이전부터 내려오는 집단적 정치역학이나 이념에 의해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1971) 참조.

6) 웨이크만(Frederic Jr. Wakeman)의 관찰에 따르면, 전통시대 중국에서 첫째, 향신 지위는 관직을 통한 권력 유지 혹은 권력에의 접근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며, 둘째, 오늘날 우리가 중국의 고급문화로 여기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언어나 생활양식을 중국의 관직세계와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신 주변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한다. Frederic Jr. Wakeman, "Mr. Wang vs. Mr. Chen: A High Ching Parable," in Robert F. Dernberger, et al., eds., *The Chinese: Adapting the Past, Facing the Future*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91), p. 255.

적 정치사회(corporatist political society)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심층 연구의 결과로 밝혀졌다.⁷⁾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농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희생시킨 기반 위에서 보호될 수 있었고, 각 생산단위 내에서는 노동자, 농민, 관리자들이 관할 당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했고, 심지어 각급 당·국가 조직을 책임진 간부들까지 자신의 배타적 이해관계나 관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급 기관의 지원을 구해야 했다.⁸⁾ 이처럼 국가가 매개된 불평등이나 차별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제거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원래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체제가 초래한 계급갈등과 불평등의 모순을 없애기 위한 반국가적 내지 반권력엘리트적 계급투쟁으로서 제기되었지만, 이로 인한 혼란 수습과정에서 국가권력이 개별 정치지도자들의 손으로 더욱 집중화되고 자의적 사용이 부추겨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은 각급 당·국가 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권력엘리트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개혁기에 들어서 국가권력에 대한 연줄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과 갈등은 개혁 이전

7) Anita Chan, Richard Madsen, Jonathan Unger, *Chen Village: The Recent History of a Peasant Community in Mao's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Andrew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참조.

8) 이같은 국가권력을 둘러싼 일련의 게임에서 철저히 배제된 집단이 불량한 계급적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당이나 국가기구의 직책도 가질 수 없었으며 각자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직책 배정 및 혜택 배분에 있어서 언제나 차별을 받아야 했다 Hong Yung Lee,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Kyung-Sup Chang, "Class Politics through the Family: Maoism and Rural Leadership Formation in a North China Commune," *Sino-Soviet Affairs*, 15(2), (1991) 참조.

에 못지 않게 치열하며, 그 결과는 각종 경제부문의 시장화의 범위와 방식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농민, 각종 노동자, 자영업자, 사영기업가, 공유기업 경영자 등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영역에 시장원리가 도입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지를 꼼꼼이 따져본 다음에 조직적으로 관계기관과 인물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물질적 매수를 시도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시장화를 촉진·억제·왜곡시키고자 노력한다. 부분적 혹은 편파적으로 시장화된 중국경제에서 시장화의 내용과 정도는 경쟁적인 계급적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화의 과정이 국가 자체의 임무인 이상 개혁기 중국에서의 계급관계는 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통해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사회주의 개혁의 결과로 국가의 계급관계 결정력은 관료제적 통제와 시장동력의 작용을 동시에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에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편파적 시장화의 증후들 가운데 일부는 시간이 흐르거나 행정적 규제 및 정치적 간섭이 사라질 때 함께 희석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편파적 시장화를 단순히 점진적 시장화의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시장화된 경제체제는 그 자체적으로 독특한 정치·경제적 존립논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존립논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모택동 시대에 각 생산단위 및 전국적 차원에서 형성된 조합주의적 정치사회가 등소평 시대에 들어서도 개혁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위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조합주의적 국가-사회 관계가 이념적으로 융통성이 커지고, 참여 사회집단들의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계급별 이해관계의 형성과 변화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거나 구조적 위치의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계급들로는 명목적인 공유 토지를 가족 단위로 경작하는 자작소농, 농촌에서 다양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기업가, 도시의 공유기업(주로 국가기업) 소속 노동자 및 경영자,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쏟아져 나온 이농노동자(民工潮),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기업가, 각급 당·국가 조직의 간부, 지식인 등이 있다. 이들 집단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탈사회주의화 혹은 시장화의 효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시장원리와 국가권력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방식의 적응을 해야 하는 이들 사회집단들의 계급적 지위와 상호관계는 시장화에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인구 비율로나 경제적 비중으로나 중국사회 최대 불평등구조는 농민과 도시노동자 사이에 존재한다. 농민들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까지 집단농업에서 가족농업으로의 생산체제 개편, 농산물 국가수매가의 인상, 고소득 환금작물의 도입, 지방 농산물시장의 확산이라는 일련의 조치와 변화를 통해 급속한 소득향상을 경험함으로써 초기 개혁의 최대 수혜자이자 지지자로 떠올랐다.⁹⁾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농산물 수매가의 재동결, 기초곡물 생산에 대한 국가의 압력 강화, 농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재정투자 급감,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작지 부족문제 잔존 등 전반적 여건이 악화로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도시노동자에 비해 다시 하락하게 되었다.

9) Chang Sen-dou, "The Floating Population: An Informal Process of Urbaniz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2, (1996), pp. 197~214.

이같은 농민과 노동자 격차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우선적인 정치적 고려의 대상인 도시지역에 대한 국가의 이율배반적 지원책에 의해 초래되었다. 즉 개혁기에 들어서 대부분 생산성이 저조하고 경쟁력이 없던 도시 국가기업들을 억지로 유지하여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각종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생활위기에 직면한 도시주민들에게 생필품 가격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퇴직·은퇴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재정의 절대 부분을 소진시켜 왔다.¹⁰⁾ 중국 정부는 이처럼 도시와 농촌에 시장원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한편으로 도시노동자들을 시장이 가져다 줄 실업, 빈곤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수매가의 시장가격화는 불허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는 시장공급에 맡기는 모순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과 도시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확대는 국가의 불공정한 경제개입에 따른 편파적 시장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 의한 농민 이익의 구조적 희생은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는 동기를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동기는 개혁기에 들어서 도·농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농촌 유희노동력이 각급 도시지역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민공조(民工潮)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민공조를 형성하는 대다수의 이농민들은 국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공식경제에 흡수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존 도시노동자들이 누리는 고용·생활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¹¹⁾ 이들은 도시에서 어렵게

10) 장경섭·조홍식, “중국 도시 기업개혁의 사회정책적 성격: 고용 및 노동복지 변화와 복원에 대한 함의,” 『비교연구』 창간호, (1997) 참조.

11) Chang Sen-dou, “The Floating Population: An Informal Process of

일자리를 얻더라도 법적 거주자격이 없어 갖가지 불리한 고용조건을 감내해야 했고,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 존재하는 이농민과 기존 도시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은 농민과 도시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편파적 시장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어려운 삶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농촌이나 인근 배후도시에 위치한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과 서비스업이며, 농민들은 이 부문에서 엄청난 고용 및 소득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¹²⁾ 농촌 유희노동력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농촌 상공업화에 가담한 기업들을 향진기업(鄉鎮企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창출하여 중국 경제와 인민을 살려내고 있는 향진기업들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초기 입장은 오히려 국가경제의 근간인 국가기업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촌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 지원이 없는 대신 불필요한 국가간섭도 적었으며 결과적으로 향진기업들은 시장경제적 환경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지방정부들의 입장은 중앙정부와 달랐다. 농업 성장의 구조적 한계를 절감한 농촌지역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고용 및 소득 창출원을 시급히 찾아내야 할 입장이었고, 이것이 농민들의 새로운 경제활동 욕구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 상공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¹³⁾

Urbanization in China,” 참조.

12) Kyung-Sup Chang, *Post-Collectivism in China: Social Conditions and Predicaments of Rural Reform* (forthcoming by Westview Press, 1997) 참조.

13) 이 당시 농민들은 1980년대 초반의 농산물수매가 인상 및 농업생산성 향상

초기에는 향진기업들의 대부분이 촌(村), 향(鄉), 진(鎭)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 운영하는 집체기업(集體企業)이었지만 최근에 오면서 개인들이 소유·운영하는 사영기업(私營企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영기업들의 상당수가 정치적 보호와 행정적 지원을 누리 기 위해 집체기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지역의 정치적 실력자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시장지향적 농촌상공업의 발전은 국가의 내부분질,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사이의 이해관계 분리 및 지방정부와 지역농민들의 협력 혹은 유착에 의해 가능했다.

사영기업가와 정부 혹은 간부의 유착관계는 농촌상공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현상이다. 개혁기 중국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소유·경영상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소유·관리하는 기업가들의 계급적 성격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기업이 공유기업이나 사영기업이나를 떠나 현재 중국의 기업가들이 기업 이윤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지향적 합리성과 고도의 경영기술로만 무장한 전문경영인들로 채워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이 복잡한 방식의 국가개입과 새로운 시장기회로 뒤엎혀 있는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가는 기업의 내부경영 뿐 아니라 정치적 환경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¹⁵⁾ 기업활동에 대한 자의적 행정간섭이 일상화되어 있고, 노

의 덕분에 엄청난 잉여소득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농촌상공업에 대한 자본 및 유효수요 마련을 가능케 했다. Ibid., 참조.

14) 이처럼 집체기업(集體企業)의 형식을 빌리는 것을 포호(掛戶) 혹은 가집체(假集體)라고 한다. Kate Xiao Zhou,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Power of the People* (Boulder: Westview, 1986) 참조.

15) Huang Yasheng, "Web of Interests and Patterns of Behavior Chinese Local Economic Bureaucracies and Enterprises during Reforms," *China Quarterly* 123, pp. 431-458; 서석홍, 「1978년 이후 중국 私營經濟에 관한 연

동자 관리에 대한 원칙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며, 생산원료 및 자본재의 가격, 은행용자의 이자, 법인소득세 등에 국가의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고, 수많은 독점적 이권사업들이 민영화되거나 새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관련 국가기구나 간부들과의 유착관계, 즉 국가권력에의 접근력 확보를 최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 개혁기 중국의 유능한 기업가란 국가의 각종 생산요소나 사업기회에 대한 시장화 조치를 자신의 기업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¹⁶⁾

중국의 개혁은 경제 관리를 경제적 원칙에 맡긴다는 기조 하에 각 생산단위에 대한 국가의 정치·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노력을 포함시켰다. 그 일환으로 과거에 경제의 정치적 관리 기능을 맡았던 각급 당·국가 간부들은 순수한 경제관리자, 즉 기업경영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순수한 행정가나 당료로서의 전문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¹⁷⁾ 이러한 적응은 결코 쉽지 않아서 많은 수의 간부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도태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이 그 동안의 당·국가 간부들의 지배계급적 지위를 구조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속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개혁은 오히려 시장경제에 결부된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 및 시장경제와 관리경제의 중첩에 따른 지대(rent)적 이권을 배분하는 새로운 권한을 간부들에게 안겨 주었다.¹⁸⁾ 편파적 시장화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집단들이 경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16)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太子黨이라 불리는 당·정 최고위 간부 자녀들의 이권 사업 진출 러시를 들 수 있다.

17) Hong 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rd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참조.

18) Richard Levy, "Corruption, Economic Crime and Social Transformation since the Reform: The Debate in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33, pp. 1~25.

제적 피해나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는 대부분 국가권력의 사용(오용)에 기초한 당·국가 간부들의 자기이익 보호가 있다.

그런데 간부들의 국가관리자로서의 공적 지위와 배타적 이해집단으로서의 사적 지위 사이에 괴리가 크게 되면, 국가가 전체 인민을 위한 공공재 조달장치가 아니라 간부들의 인민에 대한 수탈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즉 각급 당·정 기구의 간부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행정적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이권사업에 암암리에 개입하며, 자신이나 측근의 사업을 특혜 지원하는 가운데 ‘사영화·사유화 과정의 사유화’ (privatization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편파적 시장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 국가 권력의 분신인 간부들이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을 자기봉사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¹⁹⁾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개혁에서 최대의 소외자는 지식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집단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확정될 수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농민, 노동자, 사기업가, 간부 등의 지위를 갖지 않고 전문적 지식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들로 한정한다. 이같은 범위에 있는 인물들의 대다수는 현재 여러 다양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일종의 지식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노동자들처럼 도시경제 일반에 적용되는 국가의 고용보장, 생계보조,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 등을 받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에 대한 시장적 수요나 국가적 지원이 미미하여 집단적인 소외감을 느끼

19) 필자는 허북성(河北省) 대하향(大河鄉)의 1980년대 초반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농촌 간부들이 개혁기에 들어 일반 인민보다 월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상황은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장경섭, “구계급, 신계급, 先富계급,” 『한국사회학』 30(여름), (1996), pp. 305~330 참조.

고 있다.²⁰⁾ 특히 인문적 지식인의 경우 문화혁명의 고통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시점에서 이제 경제지상주의적 사회환경을 맞아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동시에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인들의 대부분도 그 지식의 상품화 여지를 곧 바로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마찬가지로의 지위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전문기술을 가진 응용적 지식인들의 경우 더러는 좋은 조건으로 사기업에 고용되기도 하고 스스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하는 등 비교적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식인집단들은 기존의 국가기능인으로서의 지위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시장경제적 기회는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²¹⁾

4. 민주화: 반시장적 혹은 반국가적 계급정치?

시장경제는 수많은 사회들에서 소외,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에 결부되어져 왔으며, 개혁기 중국도 이러한 현상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류역사상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급진적인 것은 기층 인민의 분노와 투쟁에 의존한 사회주의 혁명이었고, 비교적 온건한 것은 재분배적 사회정책 및 국가제도를 활용한 복지국가였다. 중국의 경우 이미 모택동의 지도하에 전자의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덩소평 정권은 적어도 중국의 현재 발전수준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방법이 시장사회주의 중국에서 적절하게 거론될 수 있

20) Michel Bonnin, Yves Chevrier, "The Intellectuals and the State: Social Dynamics of Intellectual Autonomy During the Post-Mao Era," *China Quarterly* 127, pp. 569~593.

21) 이들의 상당수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전문지식과는 상관없는 부문의 부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유상(儒商)이라고 부른다.

을 것이다. 사실 1990년대 들어 논의되는 정책방향과 발전목표는 이러한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즉 재분배적 국가개입 전략은 한편으로 중국 내에서의 기층민 및 지식인들의 민주화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서구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과는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서구의 경험을 보면, 복지국가는 경제적 정의와 관련한 기층민들의 일련의 정치적 요구와 저항이 민주정부로 하여금 각종 소외·곤궁집단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념적 근간인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은 민주주의 발전의 최고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²²⁾ 그러나 중국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복지주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함의도 배제된 것이며,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둘째, 중국 내부에서도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기층 인민들조차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탈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국가지도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소외 문제가 각급 당·정 간부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근본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인민들에게 서구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이란 학술적 소재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과 공산정권 사이의 정치적 인식 차이는 시장사회주의적 독재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들끼리 있을 때의 일기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곤궁과 좌절에 대한 책임을 반사적으로 공산정권이나 주변 간부들에게 돌리고 저주까지 퍼붓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복지제도로써 덮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22) T.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Doubleday, 1964), 참조.

본 연구에서 밝힌 국가 통제적 계급관계 문제를 감안할 때, 중국의 곤궁계층들이 왜 비민주적 정권이나 간부들을 자신들의 불평등, 소외, 빈곤에 대한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다. 시장경제가 일반적으로 빈곤화, 불평등화, 소외 현상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간부들의 행위와 복잡하게 결부되어 나타난다. 사실, 기층민들의 생각 속에서는 불평등화, 빈곤화, 소외를 초래하는 시장경제의 본원적 속성보다는 중앙의 정책결정자들과 지역 간부들이 갖고 있는 지역·산업적 편향성, 자기봉사적 태도, 일부 집단과의 유착, 노골적 부패 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주화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이상으로 억압적이고 부패한 국가권력에 반하는 기층민들의 계급적 목표이다.

이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곤궁계층들의 분노, 저항, 심지어 반란이 시장경제 내부의 사적인 부유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간부들이나 아예 공산정권 자체를 대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최근 사천성(四川省) 등 내륙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부패하고 착취적인 지방간부들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켜 왔고, 심양(瀋陽)처럼 경제적 침체가 구조화된 대도시들에서 실업과 빈곤을 겪고 있는 인민들이 모여 지방정부 및 국가지도부에 대해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 기간에는 공산정권이나 주변 간부들에게 환멸을 느낀 수많은 노동자, 상인, 소기업가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거나 아예 시위를 지원하고 동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물론 인정없는 부자 이웃이나 거친 고용주들에 대한 집단적 투쟁 사례들이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부자 이웃과 고용주들과 유착되어 이들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층민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희

생시킨 지역 간부들에 대한 적개심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최근 중국 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적 통치론,²³⁾ 즉 집중된 권위를 가진 국가에 의한 일사불란한 경제성장 추진 및 경제발전에 의거한 독점적 정치권력의 정당화에 대한 타당성은 제한적이다. 일상 생활에서 수많은 기층 인민들이 체감하는 국가기구 및 간부들의 행태는 궁극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해 줄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불평등과 억압을 조장하는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체제는 달랐지만 남한에서와 비슷한 권위주의 개발독재 모형이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를 통해 개혁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모택동 지휘하의 공산정권도 경제발전을 권력 정당화의 최대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환경에서 권위주의 개발독재 논리는 전혀 새로운 이념적 호소력을 갖지는 못한다.

오늘날 중국의 기층 인민들이 그들의 민주적 권리에 관련해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처럼 세련된 정치의식을 가지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경제체제가 국가에 의해 복잡하게 왜곡된 상황에서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절감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거주지역이나 생산단위에 있는 부패하고 편파적이고, 억압적인 간부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날들을 모두가 고대하고 있다. 그러한 기층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비록 체계적인 계급이념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비슷

23) Barry Sautman, "Sirens of the Strongman: Neo-Authoritarianism in Recent Chinese Political Theory," *China Quarterly* 129, pp. 72~102; Yu Xintin, "China's Modernization and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Colloquium presen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참조.

하게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기층민들의 수가 워낙 많다고 보면 공산 정권에게 엄청난 정치적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²⁴⁾ 중국의 현지도자 강택민이 반부패 캠페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부 부패를 실제로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다수 기층민들에 대해서는 가장 호소력이 높은 고도의 정치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부패 캠페인은 기층 농민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바램에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일종의 계급정치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5. 북한에 대한 함의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에 대해 난관과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중국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형제국의 우의에 기초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폐쇄적 정치노선에 혼자서 매달려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혁 및 이에 기초한 공산정권의 명맥 유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앞날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비춰주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정권이 당장은 김일성 사망 이후의 권력구조 재확립, 심각한 식량부족 및 기아 문제 대처 등의 현안에 떠밀려 장기적인 발전노선의 재정립을 차분히 모색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 사회주의체제 혹은 공산당 권력독점을 포기하지 않고도 눈부신 경제

24) 쑤우(Xueguang Zhou)는 이른바 “큰 수(large numbers)”의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획일적인 통제·억압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으면 비록 평소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저항감의 표출 계기가 마련되면 동시다발적인 정치적 참여나 동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시다발성이 곧 정치적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국지도부는 지속적인 정치적 후원과 경제적 지원을 호소해 오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체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종용해 왔다. 또한 다수의 북한전문가들도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가장 현실적인 난국 타개책으로 지적해 왔다. 북한정권은 아직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면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동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개혁·개방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방식의 점진적 자율화, 지역 농민시장의 허용 및 확산, 나진·선봉지구의 경제특구 개발 등의 조치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최근 경험에서 그 선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²⁵⁾ 나아가 북한은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해 개혁·개방의 실무를 익힌 후 돌아와 각 부문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붉은 자본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험과는 별도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노력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²⁶⁾ 도시 국가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제’를 통한 생산관리의 개혁, 연합기업소 제도를 통한 생산결정의 분권화와 기업간 연계성 강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분조도급제를 통한 생산조직 규모의 조정, 텃밭 허용을 통한 가구별 생계수요 충족 등을 실시해 왔다. 대외 경제관계도 1970년대 들어서 적극적인 대서방 무역 촉진에 나서고 1980년대 들어서는 합영법을 제정해 서방자

25) 북한 농촌경제 및 도시경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장경섭, “중국 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경제사회학적 재평가”, 통일원 편,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V): 북한실태분야』 (서울: 통일원, 1996), pp. 1~45; 장경섭·조홍식, “중국 도시 기업개혁의 사회정책적 성격: 고용 및 노동복지 변화와 북한에 대한 함의,” 『비교연구』 창간호, (1997) 참조.

26) 고승효,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3) 참조.

본의 본격적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 보완책들이 자체의 한계때문이다든 다른 외부적 요인들 때문이든 북한경제를 구조적 침체 국면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지도부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 우방권으로부터 밀려드는 탈사회주의 변혁의 파고에 대해 북한은 심각한 정치적 동요없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 아래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상황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태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현재 북한의 도시 인구 및 경제의 비중이 개혁 초기 중국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개혁이 농촌에서 농업의 탈집단화, 그리고 농촌공업의 발전이라는 수순을 성공적으로 밟아가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얻어진 경제적 여유를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한 도시 국가산업 개혁에 투입해 왔다는 사실은 북한의 성공적 개혁 전망에 뚜렷한 한계를 제시한다. 북한의 제한된 농업경제가 아무리 갑자기 회복세로 반전하더라도 국가경제 전체의 활기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며, 또 농촌의 유희노동력도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노동력만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공업의 고도 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반면 국가경제의 절대적 중추인 도시 국가산업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구조적 침체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내부적 체제개혁보다는 대외 경제개방의 효과에 크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도시 국가산업의 개혁 및 새로운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의 발전도 결국 대외 의존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전체 북한의 경제규모가 현재 활발한 외자 유입과 무역 증가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광둥성(廣東省), 복건성(福建省), 산둥성(山東省)의 성(省)단위 경제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개방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²⁷⁾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전망이 중국과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은 유사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주요한 예로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일반에 내재하는 국가의 포괄적 통제권, 정치(당)와 행정(국가)의 미분화, 각 생산 단위나 지역의 조합주의적 정치문화, 농민, 노동자, 간부 사이의 위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북한에서도 사회집단들의 계급적 지위와 관계가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좌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권력독점이 물질적으로는 공유경제체제에 대한 통제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체제 수정이 모색될 것이며 시장원리의 도입도 그만큼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함께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개혁도 부분적 혹은 편파적 시장화의 양상을 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에서는 대외 경제의존의 현실적 필요성이 중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외 경제관계에 유리한 자원을 가진 사회집단들이 국가권력의 의지에 상관없이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대외 경제관계의 창구통제(gate-keeping) 역할을 지속하는 한 이같은 국제적 시장화(international marketization)도 국가기구나 간부들의 개입에 의해 특정 집단들에게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편파적 시장화가

27) 광둥성, 복건성, 산둥성은 각각 홍콩, 대만, 일본 및 남한의 활발한 투자 및 무역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적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한의 적극적인 투자 및 무역 활동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 중국 성(省)들처럼 뚜렷한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농민, 노동자, 잠재적 이농민, 간부, 지식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각각의 지위 및 상호 계급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혁·개방의 현실적 결정세력인 당·국가 간부들의 우월적인 지위가 갑자기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층 인민들 가운데 이들에 대해 심각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 특히 도시 노동자들이 경제적 과정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간부, 도시 노동자 등의 기득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혁은 다른 경제부문에서의 잉여 추출을 전제로 하는데, 북한의 농민경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외 경제의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식인들에게 고급 노동자 혹은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농민들은 중국에서 처럼 개혁의 최대 피수탈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의 지위 중 어느 것도 갖기가 어렵고 결국 자체적으로 생산을 다변화(겸업화 혹은 비농업화)하거나 이농노동자로 변신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체제의 탈사회주의화 혹은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집단의 계급적 지위나 이해도 국가권력의 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과 관련하여 정치적 비판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6. 결 론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적 목표가 계급간 착취와 불평등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회주의 사회는 무계급(계층)성 혹은 평등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탈사회주의적 변화들이 계급·계층적 분화 혹은 불평등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논리적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이 같은 논리적 가능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험적·이론적 작업을 거쳐야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우선 중국 인민과 공산당이 온갖 역경을 넘어 철저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고 그 이후에는 충실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나름대로 매진했지만, 중국사회에는 새로운 불평등과 계급지배 현상이 확산되어 나갔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의 체제개혁이 반드시 평등사회 혹은 무계급(계층)사회로부터의 총체적 후퇴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내재하는 불평등화의 추세가 중국만을 비껴갈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 혹은 역사적 근거도 없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다시 말해 개혁 이전부터 내려오던 정치·행정적 권력구조에 밀접하게 결부된 차별과 착취 현상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탈사회주의화된 경제 조직과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거나 구조적 위치의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계급들로는 명목적인 공유 토지를 가족 단위로 경작하는 자작소농, 농촌에서 다양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기업가, 도시의 공유기업(주로 국가기업) 소속 노동자 및 경영자,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쏟아져 나온 이농노동자(民工潮),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기업가, 각종 당·국가 조직의 간부, 지식인 등이 있다. 이들 집단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탈사회주의화 혹은 시장화의 효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시장원리와 국가권력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방식의 적응을 해야 하는 이들 사회집단들의 계급적 지위와 관계는 시장화에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개혁기 중국의 복잡한 계급관계 및 불평등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계급관계가 국가를 통해 형성되고 조절됨을 밝힘으로써 계급문제와 국가-사회 관계의 중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즉 계급관계를 국가권력과 분리된 사회계급들 사이의 상호 역학관계로 보지 않고 계급적 위계나 지배가 각 사회계급의 ‘국가권력에의 접근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됨을 강조한다. 그런데 중국의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시장원리에 대체되기 보다는 시장원리의 작용 범위와 방향을 전략적 혹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 각 사회집단의 입장에서는 관련 경제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여부, 방식, 범위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 국가권력의 개입방식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일종의 부분적 혹은 편파적 시장화가 진행되어 온 중국의 계급관계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시장원리의 도입·유보·촉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계급적 분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층 인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주변의 부유집단이나 기업가보다는 국가기관과 간부들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은 산발적인 농민반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처럼 지식인집단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동조와 지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국가권력과 사회계급 문제의 중첩성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여지를 누적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근 자본주의사회들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모형을 답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좀 더 직접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형평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는 별도로 정치개혁책을 마련해 국가권력 일반을 민주화시키고 인민의 사회통합적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강하지만 민주적인 국가'(strong but democratic state)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이같은 필요성이 중국의 정치문화적 토양이나 공산당의 일당통치 원칙 등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강택민 정권의 미래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을 인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경제적 작업의 정치·사회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필요하다. 중국이 전반적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힘입어 공산당 독재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고, 그 이전에 남한에서 비슷하게 권위주의 군사독재를 장기간 지속시켰던 것으로 판단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과만 나온다면 김정일 체제를

28)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정책·제도적으로 유능한 '강한 국가'(strong state)는 흔히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국가'(authoritarian state)와 동일시되어 왔는데, 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이지만 약한 국가'(authoritarian but weak state)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잘못된 인식이다. 특히 정경유착, 관료부패 등은 정치적 권위주의가 국가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국가의 형평성 있는 (시장)경제 개입 및 적절한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경제적 개혁·개방에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에만 국한된 체제개혁이란 경제현상과 정치·사회 현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 문

- 고승효.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3.
- 린이푸 외. 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서울: 백산서당, 1996.
- 서석홍. 「1978년 이후 중국 사영경제(私營經濟)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 장경섭. 「구계급, 신계급, 선부(先富)계급」. 「한국사회학」 30 (여름, 1996).
- 장경섭. 「중국 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경제사회학적 재평가」. 통일원 편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V): 북한 실태분야」, 서울: 통일원, 1996.
- _____. 「개혁기 중국 계급구조 변화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함의」. 「성곡논총」 1997년호 (근간), 1997.
- 장경섭·조홍식. 「중국 도시 기업개혁의 사회정책적 성격: 고용 및 노동복지 변화와 북한에 대한 함의」. 「비교연구」, 창간호, 1997.

2. 중 문

- 鄧小平. 「鄧小平文選, 1974-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_____. 「鄧小平文選 III」. 北京: 人民出版社, 1983.

3. 영 문

- Bonnin, Michel, and Yves Chevrier. "The Intellectuals and the State: Social Dynamics of Intellectual Autonomy During the Post-Mao Era." *China Quarterly*. 127, 1991.
- Chan, Anita, Richard Madsen, and Jonathan Unger. *Chen Village: The Recent History of a Peasant Community in Mao's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Chang, Kyung-Sup. "Class Politics through the Family: Maoism and Rural Leadership Formation in a North China Commune." *Sino-Soviet Affairs*. 15(2), (1991).
- _____. *Post-Collectivism in China: Social Conditions and Predicaments of Rural Reform*. forthcoming by Westview Press, 1997.
- Chang Sen-dou. "The Floating Population: An Informal Process of Urbaniz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2, (1996).
- Huang Yasheng. "Web of Interests and Patterns of Behavior of Chinese Local Economic Bureaucracies and Enterprises during Reforms." *China Quarterly*. 123, (1990).
- Lee, Hong Yung.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_____.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Levy, Richard. "Corruption, Economic Crime and Social Transformation since the Reforms: The Debate in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33, (1995).
- Marshall, T. H.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Doubleday, 1964.
- Oi, Jean.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Village Govern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1971.
- Sautman, Barry. "Sirens of the Strongman: Neo-Authoritarianism in Recent Chinese Political Theory." *China Quarterly*. 129, (1992).
- Wakeman, Frederic, Jr. "Mr. Wang vs. Mr. Chen: A High Ch'ing Parable." in Robert F. Dernberger, et al., eds., *The Chinese: Adapting the Past, Facing the Future*.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91.
- Walder, Andrew.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Yu Xintian. "China's Modernization and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Colloquium presen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 Zhou, Kate Xiao.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Power of the People*. Boulder: Westview, 1986.

III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 사회통합의 관점 -

전 속 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1. 서 론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사회통합 문제를 남북한이 추구하는 인간관, 특히 여성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사회통합이 정치적·경제적 통합과는 달리 사회조직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연관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남북한이 동일한 생활양식과 삶의 유형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슨즈(T. Parsons)와 기든스(A. Giddens) 역시 사회통합의 전제로 공통의 가치지향과 자발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의 핵심은 사회통합의 한 사회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분화(differentiation), 이질화(di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차별(discrimination), 불평등(inequality)의 요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시켜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동일한 역사와 문화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국가체제, 사회·경제적구조, 대외관계속에서 50여년을 살아온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분단상태에서 극명한 분리와 이질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통일의 방식과 내용 여하에 따라 남북간 주민간에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제시될 수 밖에 없다.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통일 이후 독일은 다양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 국가, 두 사회’라고 표현되는 현재 독일의 상황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 열악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동독인들의 자괴심이라는 사회심리적 차원에 그 뿌리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치·법 등에서 진행되는 표면적이고 제도적인 체제통합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이 한 사회로 진정하게 통합되어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1975년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을 성취한 베트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 직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베트남 주민들간의 사회통합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개혁과 개방정책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의 사회적 이질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¹⁾ 이러한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사회통합의 문제가 정치통합이나 경제통합의 부차적 혹은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달성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에 어떤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이 존재하고 발생하는지

1) 전상인, “베트남에서의 시민사회 성장: 계급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6권 (1994); 북부와 남부의 베트남인들은 상대방을 ‘부패하고’ ‘천박한’ 인간들, 그리고 ‘고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서로 비하하고 있다. 이는 동서독 국민들이 상대방을 ‘서쪽 것들,’ 그리고 ‘동쪽 것들’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사회의 성장세대가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교육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학식과 인격을 도야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특정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기대이며, 또한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은 삶의 현장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일부분으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이해, 특히 사회구성원의 생산과 미래 사회의 구성원의 교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이 어떠한 인간형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설정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며, 특히 어떠한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여성상은 북한 사회현실속의 여성상이라기 보다는 북한 사회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델로서의 여성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형' 양성을 위해 집중되어 있으며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에서 같은 비중으로 교육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찰한다. 우선 제도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육의 모든 활동을 제시하여 주는 기본적인 자료이며,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교과서가 절대적인 교육매체로 이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여성상을 유추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남북한의 초등·중등학교 수준의 국어와 도덕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가 의무 교육에 해당하고, 이 시기는 한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기본적인 뿌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그 나라의 국민 모두가 배우고 생활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통하여 가장 보편적인 인물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덕교과서는 사회의 철학과 가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사회가 목적하는 국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격을 띠며, 생활 문화에 대한 이념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제도교육(사회교육)적 측면에서는, 「조선녀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조선녀성」은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세력인 정권과 당의 입장을 획일적으로 나타내는 관심을 표명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사상교육, 문화교육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들의 모범적 활동을 소개·선전함으로써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이해를 위해 내재적 관점²⁾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재해석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수직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분석하는 양

적인 방법보다는 태도나 정책, 의도등 양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과서나 잡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의미(meaning)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육의 성격

가. 사회통합의 교육적 함의

50여년간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남북한 사회의 통일을 가정해 볼 때, 통일과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이질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가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며, 무엇을 하나로 만드느냐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정치적 통일, 경제단위로서의 통일, 생활공간의 통합의 방법등 다양한 통합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래 사회통합은 사회조직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연관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과정 혹은 그 자체성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체성의 내용과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의 의미는 학자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사회통합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한 뒤르케임(E. Durkheim)은 “개인은 자유로워질수록 사회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하나의 역설적 현상을 고찰하면서 노동분화의 발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는 사회변동에 따라 노동분화가 진행될수록 기계적 연대에 기초를 둔 특수한 질서는 유기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질서로 점점 대체된다고 하였다. 공동가치와 신념에 의한 통합으로서의 전통사회의

2) 내재적 관점이란 특정 사회 및 그 사회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을 기계적 연대로 표현하고 상호의존성을 통한 통합으로 발전된 사회의 기초를 유기적 연대로 지칭하면서 유기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보다 더 강하며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즉 유기적 연대의 경우 사회 전체의 각 부분들은 다른 기능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전체로 부터 쉽게 붕괴될 수 없다는 것이다.³⁾ 특히 뒤르케임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의 분화는 사회 결속을 저해하기 보다는 더욱 증가시킨다고 봄으로써 통합이론에 대해 가치있는 통찰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노동의 분화가 단조로움과 일에 대한 충족감을 저해시킨다는 깊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단절을 소로킨(P. Sorokin)은 사회체계내 문화적 요소들의 상호의존에 관한 기능적 형태와 문화적 요소들이 중심되는 문제에 반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논리의미적 형태로 분석했다. 소로킨은 후자를 강조했는데, 이는 후에 문화통합의 한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이외에 고전이론가들로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인이 사회와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의 물질적·감정적 요소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베버(M. Weber)도 마르크스(K. Marx)와 마찬가지로 사회진화이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진화를 전통적 사회체로부터 관료화 체계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합법적 가치에 의해 정통성을 지니게 된 권위체계가 관료

3) 이에 관해서는 배규환,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재미 한인교수 협의회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미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및 장경섭, "통일 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준비된 통일," (세종연구소 주최 남북한 통합 월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참조.

제적 양상을 많이 띠면 멀수록 더욱 통합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학자들의 통합이론을 파슨즈 및 쉴즈(E. A. Shils)가 발전시켜 현대 사회통합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파슨즈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치유형은 제도화속에 편입되기 때문에 통합을 유지하는 수단은 바로 체계내의 사회제도라고 본다. 즉 파슨즈에게 있어 가치지향은 통합의 중심명제이며, 공통가치, 공통문화의 전승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규범에서 사회통합의 기저를 찾고 있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통합의 개념구조를 사회적 통합과 체제통합으로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이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평등성 및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통합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체제의 지배정당성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목적이 사회의 안정과 재생산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제도적 차원을 대변하는 국가영역과 개인 및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차원 두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상의 이론들중 뒤르케임, 파슨즈, 기든스의 입장이 남북한의 기본적인 이질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저를 마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사회체제 속에서 생활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개인들은 상이한 가치와 규범을 지향해 오면서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회통합의 전제로 뒤르케임은 상호의존성을, 파슨즈는 공통의 가치지향성을, 기든스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개인·집단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상이한 사회문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일체성을 회복하여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가치나 상호이해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한 사회의 인간은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 요구되어지는 인간관은 사회통합의 요소인 공동가치나 문화적 특성에 함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제도내에서 유지된다고 볼 때, 사회제도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제도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은 정신생활의 성장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성향들을 함양해주고, 교육적 영향에 대한 내면성과 내면화를 강조하여 전의식적(preconscious) 정신의 역동성을 강조한다.⁴⁾ 결국 교육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여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인간을 그 공동체속에서 정상적이며, 유익하고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형성시켜주며,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의 의미와 의무감 및 책임감을 동시에 각성·강화시킴으로써 훌륭한 시민을 준비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각 남북한 사회의 교육을 고찰해 봄으로써 각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간관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W. 프란케나, 이정빈·신현대 역, 「교육철학」 (서울: 이문출판사, 1987), pp 120-21.

나. 남북한 사회의 교육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한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사회문화체계에 반영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오고 있다. 남한은 교육법 1조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인간을 길러낼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화·세계화되어가는 사회에 부응해나가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현행 6차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적 인간상을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교육은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교육사상을 북한사회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주체적 사상을 가미하여 북한의 교육원리로 전환시켜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이념체계를 교육원리로 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학은 공산주의 원칙에 투철한 혁명가를 양성하고 억압적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공산주의자를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⁵⁾ 즉 북한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형'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형이란 한마디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1) 노동을 사랑하며 자각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인간, 2) 개인주의·낯은 사상·

5) 최영표 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참조.

자본주의 사상을 척결하고 주체사상을 재현하는 주체사상적 인간, 3)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집단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주의적 인간, 그리고 4) 공산주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 낙관주의적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 하면서, 개인을 희생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산주의 혁명가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김일성이 창시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5대원칙은 ①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 ② 혁명과 노동계급화 ③ 주체의 확립 ④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⑤ 교육사업의 우선으로서 사상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시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아래 북한의 교육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중오심 고취, 집단주의 실천, 교육과 노동의 결합, 조기교육의 강화, 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⁶⁾에 반영되어 교육과정에 표현되고 있다.⁷⁾

6)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북한의 교육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 그 최고의 목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를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으로서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에서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이론과 실천, 교육과 노동을 결합시켜 가르치는 방법, 조직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그리고 확고한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의 병진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교육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사회주의교육의 제도에서는 전반적 의무제, 무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제도,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보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서는 학교의 임무, 교육의 위치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7)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p. 42.

이렇듯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상반된 교육이념과 내용, 방법을 통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의 요소를 심화시켜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첫째, 제도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제도를 남한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은 유아 초기부터 공산주의적 품성을 기르기 위해 집단주의 교육방법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국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 기관으로는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이 있다. 탁아소는 생후 30일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인 만 3세까지의 유아를, 유치원은 만 4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탁아소는 젓먹이반, 젓떼기반, 어린이반, 교양반, 유치원준비반으로 구성되며, 혁명사상과 도덕교양, 지적 교육(지능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 등으로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과정은 낮은 반과 높은반으로 구분하여 2년의 교육과정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반 1년은 11년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이수하는 과정이며, 낮은반 1년은 취원이 자유로워서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탁아소에서 익힌 집단적 규율 생활과 수령과 지도자 동지에 대한 복종심과 공경심이 더욱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고,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를 시킨다. 이러한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즉 탁아정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보장하는 여성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 보육을 담당함으

<표 1>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⁸⁾

고등 교육	대학원 (석사 2~3년, 박사 4~5년)		28	연구원(3~4)		고등 교육
			27			
			26			
			25			
			24			
	23					
	전문대학 (2~3)		일반대학(4) 교육대학(4)	22	일반대학 (4~6)	
21						
중등 교육	고등학교(3)		교원 대학 (3)	19	고등전 문학교 (2~3)	
			18			
			17			
	중학교(3)		고등중학교	16	고등반(2)	
				15	중등반(4)	
				14		
				13		
초등 교육	초등학교(6)		인민학교(4)	12		중등교육
				11		
				10		
				9		
				8		
학교 전 교육	유치원		유치원	7	초등 교육	
				6		높은반(1)
	5	낮은반(1)				
유아원		탁아소	4	학교 전 교육		
			3			
남한		연령	북한			

 의무교육

로써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8) 본 표는 조주연 외,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개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 20 및 통일연수원, 「북한이해」(서울: 통일연수원, 1995), p. 218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임.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여성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학전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건강생활, 사회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표현생활 등 영역별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취학전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환경과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가정의 교육 여건이 허용하고 부모의 의지가 있다면 아동의 재능과 적성을 초기에 발견하여 신장시킴으로써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문제로 인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북한에는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사회과가 없으며 그 대신에 김일성 교과가 설치되어 있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중등일반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관은 정치사상교육, 기초과학교육,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과 체육교육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주체사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 부자 관련 과목 4개와 '현행당정책'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정치·경제 교과는 없다. 기초과학교육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통한 과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고, 응용능력을 배양하여 기술과학의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은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널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능교육과 체육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풍부한 문화예술적 소양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쓸모 있는 혁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앞에서 설명한 주체사상과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과 편제구조의 다양성 여부에서 역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남한의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계 등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으로,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및 가사·실업계 등 다양한 계열과 학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제1고등중학교와 외국어학교, 무용·음악학교 등 특수계열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계와 직업계 그리고 문과·이과와 같은 과정 구분이 없다.

또한 북한은 11년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체계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본질이 의무교육이며, 이는 모든 세대대들에게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 일반교육을 무료실시하며, 일부 소수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교육이다”라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 전반적 의무교육은 1972년 9월부터 실시, 1975년 9월에 실천되었고 초등의무교육은 4년제로 이것은 국가나 가정에 의존하는 소년기를 단축하고 일찍부터 사회활동에 참여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년의 의무교육기간동안에 학생들은 세계관 형성과 지적 발전, 품격 형성에 치중된 내용을 학습한다. 1984년 김정일의 서한에 의하면 11년 의무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등 일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이 빈약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영재 교육기관에서는 영역에 따라서 아동시기부터 재능을 조기에 계발함으로써 수월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무교육 기관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여건을 구비해 주면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의무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면, 첫째, 북한은 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이 중시되고 있다. 김일성 관련 교과나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지리나 국어,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과 수학에 있어서조차도 사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남한은 개인주의에 기초하는 개성의 신장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하는 조직생활을 강조하면서 집단과 사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즉 북한의 교육내용은 공산주의 도덕, 집단주의 정신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제도교육에서 뿐 아니라 사회교양교육과 가정교육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체계⁹⁾를 두고 있으며, 성인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성인 교육체계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교육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을 개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체계들이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회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교육측면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사회주의 사상교양의 관점

9) 남한은 대체로 학교후 교육을 위주로 하며 학교밖 공·민영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을 포함하는 데 반해, 북한은 학교밖의 사회교양교육과 가정교육을 의미하고 있어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 교양을 받는다.’ 그리하여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학교 입학과 더불어 각종 조직에 소속되어 사회교육을 받는다. 인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중학교 중등반 2년까지는 ‘소년단’에 소속되고, 고등중학교 2년을 전후하여 ‘사로청’과 ‘붉은 청년근위대’에 소속된다. 1946년에 창설된 소년단은 만7~13세의 어린이들을 우수한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년전위 조직이다. 이들의 주요활동내용은 아동단원들의 투쟁정신 함양과 농촌 생활문화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은 소년단을 마친 14~30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장년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당정책과 노선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고 당의 수비대로서의 활동을 한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군사조직의 성격을 띤 민병조직의 하나이다. 이는 고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들의 반항요소를 색출하고 자아비판과 사상 결속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적 기둥’으로 성장할 것을 강요받는다.¹⁰⁾

성인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성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인교육에서는 혁명적 세계관의 발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당, 전

10) 손봉숙,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서울: 공보처, 1993), p. 120~121; 전숙자, “북한의 여성상 연구: 혁명성과 전통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 29집 (1995), pp. 379~380 참조.

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 아래 온 나라에 혁명적 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2> 남북한 교육의 비교

	남한	북한
교육이념	· 홍익인간의 이념	· 주체사상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목표	· 민주시민의 양성	· 공산주의 원칙에 투철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의무교육	· 초등(6)-중학교(3)의 9년	· 유치원(1)-인민학교(4)-고등중학교(6)의 11년
취학전교육	· 개인의 환경과 선택에 의해 결정됨 · 교과목의 구분이 없고 영역별로 학습내용을 제시함	·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담당 · 김일성·김정일 관련교과 등 교과목별로 편제를 제시
초등교육	· 교과목간의 통합이 이루어짐 · 외국어 교육 실시	· 사회과 대신 김일성 교과가 설치되어 있음 · 외국어 교육의 폐지
중등교육	· 자유선택 과목 또는 교양과목 개설	· 김일성 부자 관련 과목 4개와 '현행당정책'이 설치되어 있음 · 교과선택의 폭이 제한됨
성인교육	· 개인의 학습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국가보다는 민간, 사회단체 주도	·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제한된 프로그램 제공 · 국가 주도

성인교육을 교육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은 개인의 학습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른 제한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성인교육이 국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민간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습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북한의 성인교육은 내용과 형태 면에서 제한적이며, 폐쇄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한 교육의 성격은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북한의 제도 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 여성상을 중심으로

가. 분석 기준 및 대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관을 연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인간성의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인간이해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다룬 많은 연구들의 인간관을 종합해서 가장 간단히 분류한다면 인간의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두가지 특성에 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의 객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의 동일성(identity)을 찾고 이상적인 모형(model)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주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객관적 대상이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인간에 대한 다른 차원으로부터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두가지 특성은 인간의 삶의 현실속에서 역동적 관계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의 역동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시간적 관계, 공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를 말한다.¹¹⁾ 이러한 관계들의 내용, 방법, 형식 등이 모두 함께 삶의 현

상을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인간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철학과 가치들이 인간관계 형성의 과정속에 내재화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 그 사회가 갖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의 모습은 교육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역시 교육을 통하여 전달되어 진다. 그러므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나타난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슨즈(T. Parsons)의 유형 변수와 같은 개념도식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보편성-특수성, 감정중립성-감정성, 분산성-특수성, 귀속-업적, 집합-개인(자아) 등의 분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단순화하여 가족에서의 인간관계(*gemeinschaft*)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gesellschaft*)로 분류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다. 한편 가치에는 흔히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평가하는 규범적·도덕적 가치, 선악의 구분, 심미적 선호¹²⁾ 등이 있다.

인간관계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각 학문마다 인간관에 대한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관을, 행정학에서는 인간관계로에 바탕을 둔

11) 김인회, 「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육원리의 탐색」(서울: 정익사, 1981), pp.20~25.

12) 이운죽, 「북한 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 249.

사회적 인간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 또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지혜가 도덕이라 볼 때, 도덕교육은 형식적인 덕목을 나열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그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근본 규범을 탐구한다. 도덕교육에 대해 깊이 연구한 콜버그(Kohlberg)는 어떤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초문화적 개념으로 도덕성을 파악하고 있다.

차원	내 용
인간 관계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인간관계는? : 가정적/ 사회적 차원의 인간관계중 어느 쪽이 더 강조되나? 이것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나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나?
가치 내용 및 개념	인간관계형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 내용 및 개념은? : 충성주의, 주체사상, 은혜, 보람, 근검절약, 공중도덕, 체력강화, 신뢰성, 청결, 예절, 지덕체, 화목, 질서, 혁명, 경로효친, 사랑, 협동심, 적개심, 개인의 안녕, 행복 등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가치 매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치매개는 과연 누구인가?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강반석, 어머니, 친구, 선생님 등 누가 더 가치매개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가?
가치 차원	인간관계 형성에서 강조되는 가치차원은? : 보편적-편파적인가? 감정적-감정중립적인가? 귀속적-독립적인가? 귀속적-업적적인가?

그렇다면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도 인간행동의 규범을 설정하고 인간정신의 기본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도덕교과일 것이다. 도덕교육에서도 인간관에 대한 이론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발달해 가는 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도덕적 인간관의 형태가 달라지며 관점과 모형이 변

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간관을 분석해보기 위해 남북한의 도덕교과와 국어교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성원들간의 이질화, 분리, 차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 방편으로서 남북한 교육에 나타난 인간관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우선 개인(여성)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개인(여성)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교과 서명	북 한			남 한				
	도 덕		국어	도덕		국어		
학년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3,4학년)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 혁 명활동」 (고등중1)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2)	인민 학교 4학년	고 등 중 학 교 1학 년	초 등 학 교 3,4 학년	중 학 교 1,2학 년	「쓰기·말 하기·듣기 읽기」 (초등학교 4)	중학교 1학년
저자	라경옥 홍기천 김명남	맹금석 김유수 김유철	안옥규 최해룡	교 육 부				
출판 년도	1989	1987	1990		1995	1996	1996	
출판 처	교 육 도 서 출 판 사			한국교육개발원				

나. 분석결과

(1) 인간관계

(가) 북한

(사례1) 일찍 일어난 정남이는 어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밖에 나가 채조를 하고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이윽고 부엌에서 식사하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공부하던 누나가 일어나 밥상을 조용히 갖다놓고는 말끔히 행주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저들과 음식그릇들을 받아 차근차근 상에 놓았습니다. (인민학교 3학년, 공산주의 도덕, p. 32)

(사례 2) 김정숙어머님께서 할아버님과 할머니님 앞에 정중히 나 앉으시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이도 많으시니 이제는 좀 쉬셔야 겠다고 말씀을 올리시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님과 할머니님을 저희가 모시겠다고 하시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오금을 놀릴때까지 일을 해야하며, 큰일하는데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업혀살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고등중학교 2학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4과 p. 15)

(사례3) 영예군인들과 안해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이렇게 흥겹게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 있는 남편들과 한대오에 서있는 영예군인의 안해들은 혁명가의

안해, 녀성혁명가들입니다. 당에서는 언제나 뒤에 숨은 노력들을 평가합니다. 이 동무들이 남편들의 시중도 들도 일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분에 넘치는 말씀을 받아안은 영예군인 안해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들의 팔다리가 되어 출근길, 퇴근길을 함께 걸어온 그들의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고등중학교2학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15과 p. 64)

사례 1과 2에는 북한의 가정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간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그녀를 돕는 딸의 모습, 나이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며느리의 모습 등은 가정내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가정적 차원에서는 전통적이고 수직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 2에서는 김일성 가족을 일종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으로 제시하여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속에서 볼 수 있는 상하수직 관계를 강조하고,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례 3에서는 부부관계라는 개인적 관계가 상호 협조 및 보완의 관계와 동시에 평등한 동료로서의 위치로 묘사되고 있다. 즉 점차 과거의 종속적인 수직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수평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들의 혁명가로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사회는 여성들에게 착한 며느리, 자상한 어머니라는 전통적 면모와 남성과 평등한 사회활동을 해 나가는 혁명적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4)…김정숙 어머니… 고향 잃고 갈 길 없어 해매이던 아이들/ 캄캄한 어둠에서 건져내시어 / 장군님의 깃발아래 세워주시고 / 혁명의 꽃송이로 피워주신 어머니 (인민학교 4학년 국어, p. 48): 개인(김정숙)과 집단 (다수의 아이들)

(사례 5) 김정숙어머니께서는 농사일로 어린애를 돌보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보시면 그 애를 살뜰하게 보살펴주시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앓아 누운 집을 찾으시어서는 친부모의 마음으로 돌보아주시었습니다. 옷을 지을 줄 모르는 녀인에게는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주시고 맛있는 음식이나 흔한 산나물이라도 생기면 꼭꼭 이웃에 나누어주시었습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26과 p. 111)

(사례 6)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수많은 여성들을 이끌고 공장에 나오셔서 몸소 온종일 삼질도 하고 질통도 지시면서 건설자들을 고무하여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시었습니다.(고등중학교 2학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p. 28)

사례 4, 5, 6은 김정숙이라는 개인 대 불특정 다수와의 사회·집단적 관계가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사회는 여성들에게 획일적이고 공통된 인간상- 즉 김정숙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적 혁명투사로서의 여성, 노동하는 여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 소양이나 특성보다는 집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상하관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나) 남한

(사례 7) 동생이 내 일기장을 또 찢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뻑 지르며 동생을 마구 때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나만 꾸짖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니가 미워졌습니다.(초등학교 4-1 국어, p. 98)

(사례 8) 모두가 잠든 늦은 밤이다. 오늘 저녁 회초리를 든 것이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며칠째 너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참다 못한 엄마가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제야 들어오느냐?'고 야단을 치자.....전에 없이 대드는 바람에 그만 매를 들고 말았구나.....끝없는 경쟁이 힘들고, 친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엄마도 이해해야겠구나. 그래, 이제라도 엄마가 너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구나.(중학교 2, p.88-89)

사례 7, 8을 보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상하수직적 관계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사례 7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례 8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한 사회에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여성에게 강조되는 전통적 가치중의 하나인 순종(順從)의 개념이 현대로 오면서 위계적 일방성이 줄어들고, 점차 상호존중하는 형태로 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관계가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의 대안으

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9)남편 : 당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을 돌보도록 해요. 당신이 직장에 다니니까 나도 불편하단 말이요.

아내 : 싫어요. 나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래요.

남편 : 돈은 남자가 버는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오?

아내 :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고요.(중학교 2 도덕 , p.29)

위의 사례 9는 남한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의 '가치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이라는 단원에서 가치갈등의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사례가 교과서 내에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남한 사회에서는 남녀의 인격적 평등을 기초로 하는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을 제대로 현실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성인 아내는 자신의 능력 발휘 나아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주체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 남편은 자신의 불편함과 자녀교육을 이유로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남한 사회내에서 부부라고 하는 개인적 관계에서 전통적 여성성과 현대적 여성성의 가치갈등을 짐작케한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성이 보다 잘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가치내용 및 개념

(가) 북한

(사례 1) 혁명전사들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과 숭고한 의리 앞에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니다. (인민중학교 3학년 공산주의 도덕, p. 4)

(사례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겠습니다》 전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전기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며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 전기를 우리는 아껴쓰고 절약하여야 합니다. (인민학교 4학년 공산주의 도덕, p. 69)

(사례 3) …어머니,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욱 가슴 뜨겁게 느낀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충성다하는 참된 딸이 되겠어요. (인민학교 4학년 국어, p. 11)

(사례 4) 어머니 개미 : 짭뽕아, 동무들과 같이 일하니 얼마나 좋으나… 여럿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백배도 되고, 천배도 될 수 있단다. (인민학교 4학년 국어, p. 24)

위의 사례 1, 2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김일성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성

주의, 주체사상, 수령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느 특정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공산주의 도덕’ 전체에 기본이 되는 가치이다. 또한 몰자부족 등에 시달리는 북한사회는 공중도덕으로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 3, 4에서는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길러냄으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충성심, 협동심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가치를 남녀를 불문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식의 문투를 이용해 사회주의 혁명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례 5) …은주는 어느새 원주필을 꺼내들고 수첩장에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중한 전기를 망탕 쓰고 있다. …당에서는 생활이 넉넉해질수록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하라고 호소하는 거란다. 당이 제일 가슴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량비현상이다.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p. 117)

(사례 6) 빗값으로 팔려가는 은희가 어머니와 헤여지기 서러워, 동생과 헤여지기 가슴아파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는 인간 생지옥 남조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불붙듯 솟구칩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p. 125)

(사례 7) “김정숙 동무는 나에게 대한 충성심이 매우 지국한 동무였습니다. 산에서 유격투쟁을 할 때 적의 토벌이 심하여 불을 피울 수 없게 되면 젖은 옷가지를 자기의 몸에 품어서 말

리워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한일은 동지를 위한 것이었지
가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등중학교 2 학년 ‘친
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p. 75)

사례 5는 절약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당을 위한 입장에서 강조하
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공히 ‘인사 잘 하기, 청결, 절약, 정직, 우애
등’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중 상당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시민이 해야하는 기본적인 임무로 볼 때, 남한
과 북한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들은 똑같이 강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된다면, 남북한의 교육통합의 시발점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6은 남한 사회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이를 통한 북
한 사회의 상대적인 체제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곧 국가와 당, 김일성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
성심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의 3대 목적, 즉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를 달성하
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례 7은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행복이라는 소의를
희생하는 혁명성 다시 말해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각 개인들의
혁명적·투쟁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보다는 전체 다수를 생각
하는 집단주의적 사고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의 학교 교육의 이념과 목적인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의 양성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과 국제 공산주의 계급 혁명과 가깝게는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혁명사업에 뛰어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교육에 있어서의 이념성, 다시말해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 주체사상교육, 집단주의 이념은 통합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임은 물론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남한

(사례 8) …유관순은 공주와 서울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을 때에도 유관순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였다. …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4-1 국어, p. 11)

(사례 9) 이제 연세가 여든을 넘으셔서 고목 꺾질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어떤 큰 힘이 하나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 “내 손은 약속이다.”를 외치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왔던 것이다. (중학교 1-1 국어, pp. 74~75)

(사례 10) “불효 여식 심청이는 부친 눈 뜨게 하오려고,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삼백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나오니, 소녀가 죽더라도 아버의 눈 띄우고 착한 부인 작배하여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조상향화 전케하오.” (중학교 1-2 국어, pp. 86~87)

(사례 11) 어머니: 나는 무엇보다 네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

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지 않겠니? 정신적으로 고민도 있고 갈등도 많겠지만, 순수함을 잃지 말았으면 해. ...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순수함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중학교 도덕 1, p. 57)

사례 8에서는 유관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애국심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남한 교과서 내에서 볼 수 있는 애국심은 북한에서의 국가와 당에 우선하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과는 차이가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초국가적인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구체적인 충성심의 대상이 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를 본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례 9, 10 은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성애와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교과서 내용에서도 볼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강반석(김일성의 생모), 김정숙(김정일의 생모)이라는 특정 인물이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모성애와 같은 전통성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혁명성을 고루 갖춘 인물로 이상적인 어머니,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데 비해 남한의 경우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딸의 모습을 통해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이 북한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1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정신과 신체가 조화를 이루며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인간을 키워내고자 하는 남한의 교육 이념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치매개

(가) 북한

(사례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다양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 부모와 웃사람을 존경하고 동무들과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절바르게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철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학교 3학년 공산주의 도덕, p. 27)

(사례 2) 제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기쁨에 넘쳐 빙 둘러 있는데서 나는 뻐시있는 …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p. 83)

(사례 3) (강반석)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원썩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오셨습니다.(고등중학교 1학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1과 p. 7)

(사례 4) 그러면서도 안중근처럼 혼자서 싸우거나 원썩 몇 놈을 없애치우는 방법으로는 결코 나라를 찾을 수 없다는 참 뜻을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차천리로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손을 부여잡고 오늘밤에야 이 늙은 것의 가슴에서도 민족의 피가 다시 끓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었습니다

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5과 p. 20)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가치매개자로서의 특징은 김일성 일가가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인물들로서 묘사되고 있다. 사례 1을 보면 북한사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일때만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며 강조되어진다. 또한 사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중근 의사의 삶을 통해 애국심을 교육하면서도 안중근이라는 특정 위인에 그치지 않고 김일성이라는 또다른 가치의 전달자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교과서에서는 혁명성, 주체사상의 실현과정에서 항상 직·간접적으로 김일성부자가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대를 이은 맹목적 충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남한

(사례5) 이황선생의 '잠언(箴言)' 중에서

몸가짐은 공손히, 일을 맡으면 공경히, 남과 사귀는 정성스럽게 하라.

'프랭클린의 좌우명(座右銘)' 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언제나 유익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쓸데없는 행위는 끊어 버리자.(중학교 1 도덕, pp. 42~43)

남한의 경우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적을 통하여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예들 들면, 원효, 이황, 영조, 일연, 석가모니, 공자, 간디, 루소, 프랭클린, 노벨 등의

삶과 행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치를 교육시키고 있다.

(4) 가치차원

(가) 북한

(사례 1) 아버지, 어머니를 빼앗아간 일제놈들이 돼지는 것을
제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민학교 3학년 공산주의 도
덕, p. 80)

(사례 2) ...지주놈은 얼굴을 싸쥐고 몸부림치는 순희에게 달
려들어 약탕관을 옆질렀다고 머리채를 거머쥐고 광광 땅바닥에
짓쫓기 까지 합니다. (인민학교 4학년 국어, pp. 74~75)

(사례 3)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길만
이 살 길이라는 것을 ... (인민학교 4학년 국어, p. 118)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가치차원을 남한의 그것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편파적·감정적 서술이 많다는 것이다. 사례 2과 3에서 보면, 지주(地主)라는 특정 계급과 미국 및 남한을 비어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이해에 앞서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가치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지주나 미국, 남한을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속에 가두어, 사고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남한

(사례 4)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중학교 1-2 국어, p. 70)

(사례 5) ...분단이 고정화되자,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방식은 달리하였지만 당시의 분단 상황을 타파하여 새 체제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보다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던 북한이 무력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 바로 6·25전쟁이었다. (중학교 2학년 도덕, pp. 219~220)

이에 반해 남한 교과서에서는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족(특히 어머니)에 대한 묘사중 일부는 감정적 표현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서술이나 가치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남북한 교육에서 추구되는 여성상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인간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면 북한에서는 개인이나 가족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 특히 김일성 부자와의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반면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가족관계가 사회관계보다 더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체관계안에서의 수직·수평관계는 북한의 경우 김일성 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수직적 관계로 나타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념과는 모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수평적 관계를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수직관계들이 수평관계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의 내용이나 개념을 보면, 북한의 경우 우리 민족의 공통적 가치와 공산주의 혁명투사에게 요구되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남한이나 미국 등 자유국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등의 혁명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북한의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한은 보편적인 윤리·도덕외에도 개인의 안녕이나 행복과 같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들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전통적 가치체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해 왔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합 교육에서는 절약 등과 같은 민족공통의 가치 등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명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개인의 안녕이나 행복과 같은 자유민주사회적 가치는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치매개의 차원에서 남북한 교과서상에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직·간접적 매개자로서 김일성 일가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남한의 경우 가족 - 특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등과 같은 연장자 - 과 선생님, 위인과 같은 인물들이 주요 매개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모든 관계에서 김일성 부자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개조라는 교육적 측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부자 우상화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교육목적 역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치차원에서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경우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인민들이 김일성 부자에 대해 맹목적·수동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특히 남한에 대한 서술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편파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체제를 비하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전반적으로 가치서술에 있어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북한 사회교육에 나타난 여성상: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조선녀성」은 격월간 여성잡지로 북한의 선전매체가 가지는 두가지 성격을 공유하는데, 첫째는 여맹의 기관지¹³⁾로서의 특성이고, 둘째는 잡지로서의 특성이다. 즉 「조선녀성」은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사상·문화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소개·선전함으로써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교양 선전물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에 이 기사들을 통해 북한 여성이 지향하도록 요구받는 여성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1995년 실시한 '79~'92년까지의 「조선녀성」에 '95~'96년까지의 「조선녀성」을 새로이 첨가하여 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가. 인간관계

(사례1) 남포시 자동차 운수대 운전사 리화순은 결혼을 하고 나자 운전사일을 시어머니가 그만 두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

13) 기관지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등이 당정책을 해설하고, 당정책을 구현하는 기관이나 조직체의 시책, 사업내용을 해설, 선전하기 위해 발간하는 신문잡지를 말한다.

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알맞는 일을 골라보라고 전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자 재봉일을 배웠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리화순은 이 사실을 놓고 남편과 의논을 하였다.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겠어요, 당의 배려로 운전기술을 배웠는데 이렇게 집에 앉아 있을 순 없지 않아요”라고 하며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설득한다. 며느리의 뜻에 감동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게 된다. (81년 10호, pp. 38~39)

(사례2) ...안해는 일생동안 남편의 사업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가 아니냐. 지난날 나에게 안해를 진정한 혁명동지로서가 아니라 집살림이나 하고 남편의 뒤바라지나 해주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한 때도 있었거든..... 안해는 남편을 잘 돕고 리해하고 사업을 맡들어줘야해. 식생활과 옷차림은 물론 남편이 가정의 사사로운 일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고 직장에 나가 맡은 일을 잘 하도록 힘껏 도와야 하구.(95년 4호, p. 40)

위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여성은 가족적 차원(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집합적 차원)의 관계 모두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례1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족관계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전통적 여성상을 갖도록 타이르고 있지만, 며느리는 사회적 관계로 확대시켜 나아가 혁명적 여성상을 갖길 원하고 있다. 여기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남편 또는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점으로 보아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며느리가 당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2는 여성이 더 이상 가족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혁명동지로서 남성과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 혁명적 여성상을 가진 사회적 관계에만 치중하지 말고 남편공경을 잘하는 전통적 여성성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도 개인적 관계를 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은 가족, 사회적 차원의 관계 모두를 형성하고 있고, 가족차원의 관계 속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의식없이 남녀가 동등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할 수 있다.

나. 가치내용 및 개념

(사례1) 개천군 개천읍 84반 한추옥은 길가의 꽃밭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타이르려고 하다보니 그 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부끄러워한다. 옷이나 깨끗이 입혀 유치원에 보내면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아침이면 아들 정호와 이 길을 티 하나 없이 깨끗이 쓸곤 하였다. 어느날 웬 학생이 비를 맞으면서 심어 놓은 꽃이 넘어질까 봐 열심히 받쳐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들이었다. 어린아들이 어릴적부터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지니도록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80년 4호, pp.46~47)

(사례2) 정주군 인민병원 제3예방과 중의 최영신 동무는 35년간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쳐 묵묵히 환자치료에 한

평생을 바쳐온 당의 참된 보건 일군의 한 사람이다. 그가 맡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이 심한 출혈로 영양이 약해진 중환자들이었다. 그럴수록 혁명적 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다할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임하였다....(94년 1호, p. 25)

(사례3)리영옥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들 수가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의 구절구절이 가슴에 새록새록 안겨와서였다.....그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일을 더 하리라 마음다지고 또 다지었다....(은혜로운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늙은이는 여생을 편히 쉬도록 해주시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년로하신 몸에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험한 두렁길을 걸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이시다. 그이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털어드리자. 농사일을 돕자)...이런 마음을 안고 그는 거름을 모으기 시작했는데...(95년 조선녀성 2호, p. 30)

사례1은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집단주의 정신, 공중도덕 및 질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성, 충성심을, 사례2는 혁명적 동지애, 인간에 대한 헌신적 사랑, 사례3는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다. 가치매개

(사례1) 백오목 녀성은 아버지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안으며 팔순이 훨씬 지나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자손들을 위

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는 충신과 효자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었다.....(93년 2호, p12)

(사례2) 딸 경희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왜 없는가고 물었을 때 영실 녀성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곧 아버지이시다고 대답하였다....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딸과 함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바쳐간 사실 등은 그대로 경희의 어린 마음에 순결한 충성심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95년 1호, p 25)

위의 사례를 보면, 북한 여성들이 혁명성이라든가 주체사상을 실천해 보이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들이 갖는 어떠한 관계의 형태에서든지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이 매개로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아버지 수령님과 인민들과의 관계를 섬김과 보살핌의 관계로 규정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대가족으로 인식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꾀하고 김일성 부자의 일일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김일성 死後에도 김일성수령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 사회는 현재 김정일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맹목적으로 따랐던 김일성을 등에 업고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라. 가치차원

(사례1) 부전군 송배전소 합지원반 선로공 김준호의 아내 리명옥은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 보조공이 되었다. 그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단지 남편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남편과 함께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제몫을 당당히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요. (80년 7호, p31-32)

(사례2)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공훈과학자 준박사 권병미 동무

생산현장에 이른 그는 연합기업소의 복잡한 생산기술적 공정들에 대한 료해사업에 달라붙었다. 한편 밤을 패워가며 각이한 분야의 넓고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에 힘썼다..... 권병미 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학적 및 프로그램보장문제에 대한 연구와 특히 경영활동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실현에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어찌다 명절옷을 떨쳐입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싶었지만 그는 과학자의 한걸음이 늦춰지면 조국의 발걸음이 열걸음, 백걸음 뒤진다는 생각을 앞세웠다. (96년 2호, p.34)

(사례3) 강반석 어머니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아드님을 위하여 괴롭고 아픈 심정을 다 누르시고 그 밤에 다시 아드님을 떠나면 곳으로 떠나 보내기로 하시였다. 참으로 강반석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고 인자하시면서도 큰 일을 위해서는 결코 사사로운 인정에 끌리지 않으시는 강인한 분이시였다.....(95년 2호, p 24)

사례1은 여성이 남편을 돕는 보조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제몫을 해내고 노동에서의 주체임을 자각하여 주의의식을 갖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차원을 보인다. 사례2는 노동의 중요성과 결혼한 여성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개인적 욕구를 버리고 일에 몰두하여 국가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가치중립적이고 편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례3은 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무시하는 가치중립적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시키고 있는 것 같다. 김일성 사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북한사회가 표방하는 혁명성과 주체성을 모두 포함한 혁명성을 가진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편파적이고 가치중립적, 독립적 가치들을 갖도록 여성을 재사회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북한의 비제도교육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 여성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계가 가족 차원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가정, 전통적 여성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더 진취적으로 혁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붕괴의 위협성과 계속되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이 북한 사회에서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재무장(여성의 혁명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갖는 노동에 대한 사랑과 의무에 대한 가치를 강화시켜 모든 인민을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의 개인적 차원의 관계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이 개인관계속에서 갖게 되는 전통적 여성성은 기본 전제로 하고, 사회적 차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족을 독자적 사회단위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세포로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

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을 하나의 하부조직으로 강화시켜 좀 더 용이하고 그리고 북한사회 붕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혁명을 승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속에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을 동시에 요구 받는 불평등 구조속에서 생활한다. 이것은 김일성의 권력강화로 부터 출발, 김정일의 권력세습 추구때문에 더욱 강화된 가부장제적 국가질서의 확대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¹⁴⁾할 수 있다.

둘째, 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김일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을 숭배·승격화함으로써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정치적 타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김정일은 말했다.¹⁵⁾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 곧 수령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의 결론과 결정의 비준은 곧 수령님의 그것이다. 유일지도체제확립이 당의 유일사상확립의 기본핵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일성 한사람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계속되어 북한 인민들을 정신교육 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김정일 체제가 완전하기 구축되지 못하여 보이게 될 북한 주민들의 불안성을 최소화하여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혁명의 승계를 원만히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재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p. 224

15) 신평길, “김정일 출범과 그 통체체계의 확립(Ⅲ),” 「월간 북한」 3호, (1995), p. 93.

셋째, 북한 사회는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워 모든 인민들의 평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어 남성과 여성은 수직적인 위계관계를 가졌었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혁명동지로 가정에서도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가정이 혁명화되어야 사회가 혁명화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김일성 사후 갖게된 사회·정치·문화적 위기의식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남녀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혁명적인 여성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북한 교육에 나타난 여성상의 의미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작업은 크게 제도 교육과 비제도 교육으로 구분되어 첫째,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북한과 남한 여성상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고, 둘째, 「조선녀성」을 김일성 사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본 여성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 교과서 분석 결과는, 북한은 가족적 차원의 관계와 사회적 차원의 관계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차원의 관계가 빈번히 제시되고 있고 그 속에서 여성은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가치관, 예를 들어 협동심, 충성심, 절약 등과 같은 가치들을 여성들이 갖게되고, 혁명성과 주체성을 함께 지닌 공산주의적 새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적개심과 같은 북한 특유의 가치관과 청결과 같은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즉 이중적 구조의 가치를 여성이 동시에 갖도

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강반석 등의 김씨 일가가 모든 관계에서 간접적인 매개체로 등장하여 여성들에게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계속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치 차원도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성들은 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김일성 일가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여 그들에게 맹목적인 충성과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가족적 차원에서의 관계가 더 빈번히 제시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설득과 타협, 이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민주 시민 사회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도 민주 사회의 한 구성원인 시민으로 자신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사회적 차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여성에게 지덕체의 조화, 개인의 행복과 안녕, 우정과 같은 개인적 가치들이 애국심, 경로효친 사상, 절약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매개의 역할은 북한과는 다르게 그들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게 되는 웃어른, 특히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선생님, 위인들이 작용한다.

둘째, 비제도 교육, 즉 사회교육속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특징만을 정리해보면 혁명동지로서 여성의 사회적 차원(집합적 차원)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혁명적 참여성과 주체 사상의 재무장,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의 뿌리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여 붕괴 가능성이 있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가정적(개인적)차원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김정일의 권력세습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가부장제적 국가 질서의 확대에 의해 여성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서 오는 상

호 갈등적인 혁명적 여성성과 전통적 여성상이라는 이중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 가정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혁명 동지로서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혁명적 여성성과 전통적 여성상이라는 이중적 부담 속에서 혁명적 여성상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에서 교육하고 추구하는 여성상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이러한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혁명적 여성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김정일 권력 승계를 무사히 마치고 현재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체제 붕괴의 위험적 요소들을 청산하여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더라도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여성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교육에서 추구하는 혁명성은 '통합교육'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통합된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남한의 교육과정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되, 북한교육과정의 장점 및 북한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남한의 교육과정과 교과편제에서 강조되는 인간상을 기초로 하되 초기단계에서는 교사수급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력보충교육 및 재사회화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새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사회이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민주적 태도 함양, 개인의 전인적

발달 및 창의성 개발, 새로운 통일국가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그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셋째, 급격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이념교과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현행교육과정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며 교사에게는 남한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적절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북한주민 및 교사, 학생의 감정적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새 교육과정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북한지역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남한지역의 교육과정의 내용에도 필요한 수정을 가하도록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족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북한자료>

- 강운빈, 「인간개조이론: 주체사상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명남, 「공산주의도덕」(인민학교 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김유수·김유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고등중학교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7.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맹금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고등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4.
- 안옥규·최해룡, 「국어」(인민학교 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 「국어」(고등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우제국 외, 「공산주의 도덕」(인민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녀성」.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9~1996 각호.

<국내서적>

- 김귀옥, “통일을 향한 남북 사회·문화연구.”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민중사, 1994.
- 김수곤 외,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박현선, 「여성과 통일」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3
- 북한연구소,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손봉숙,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서울: 공보처, 1993.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8.
- 임재택, 「사회주의국가 (북한을 중심으로)의 영유아 보육현황과 특성」 「동아시아의 보육현황과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 및 방향」. 서울: 중앙대학교 국제여성연구소, 1994.
-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은영, 「통일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협의회 세미나, 1995)
- 장경섭, 「통일 한민족국가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세종연구소 주최 남북한 통합 월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 ,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의식, 이차경제, 이차사회」 「현상과 인식」 18권 4호, (1994).
-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독일과 베트남」.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6호 (1995년 여름).
- 장필화 외, 「육아의 현실과 탁아제도의 미래」. 서울: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0.
- 전상인, 「베트남에서의 시민사회 성장: 계급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민족과 문화」, 6권 (1994).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여름호 (1995).
- 전숙자, “북한의 사회교육을 통해 본 여성상.” 「여성학논집」(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제11집 (1994).
- , “북한의 여성상 연구: 혁명성과 전통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 정용길 외,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 대책 연구」. ???통일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위원회 1996
- 조주연 외,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모형 개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최 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최영표 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 한중하 외,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영문서적>

- Giddens, Athony. *Central Problem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London: Macmillan, 1979.
- Eberstadt, N. and J.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 and Prospects*.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IV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박 형 중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동유럽, 구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다면적 위기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더욱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와 함께 통일 이후의 국가이념,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통일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논의, 양 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주로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학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 경제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북한문제, 남북한 관계를 다루는 데 어떠한 학문분야가 주도해 왔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 논의는 그간 더 많은 관심을 끌어 왔으며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개괄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의 여파로 북측은 총체적 문제지역으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의해 기존의 남북관계에 부자지역-빈자지역간의 갈등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차원과 함께 남북한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남북한간의 통일의 성격과 그 이후에 제기되는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을 가능한 한 동태적이고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분단상태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여러 차원의 실질적 문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2. 사회통합의 개념설정

'사회통합'이란 개념은 한국에서는 주로 분단국 통합사례를 연구하면서 등장하며 또한 학자에 따라 상이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남북한,¹⁾ 독일의 통일²⁾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이란 분열되어 있던 두 주민 집단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회의 이상적 통합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베트남 통일사례 연구³⁾에서는 억압과 강제를 통해서라도 남북베트남이 분열하

-
- 1) 최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논단」 제6권 (1992년 12월); 이은숙,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이은숙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참조.
 - 2)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6호, (1995년 6월); 김택환, "獨逸統一後 政治經濟社會統合의 애로가 韓國統一에 줄 教訓," 「韓國敎員大敎授論叢」 (1993) 참조.
 - 3)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嶺南大統一問題研究」 제16호 (1994년 2월); 공유식, "베트남의 사회통합: 국가형성의 조건과 과제," 「亞洲社會科學論叢」 제7호 (1994년 2월) 참조.

지 않고 통합상태를 이루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이상적 차원에서 설정한 경우에도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일부학자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도, 문제핵심으로서 남북한 문화·정서적 이질성과 그 극복을 상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협은 “사회통합의 궁극적 해결의 열쇠는 50년에 가까운 분단 때문에 야기된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와 의식구조의 이질화의 극복의 문제”⁴⁾라고 주장한다.⁵⁾ 이에 대하여 사회통합에서 문화·정서적 차원보다는 사회·정책적 차원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장경섭은 통일의 과정에서 특히 북한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헌법적 권리”라는 뜻에서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사회통합 방안이 될 수 있다’⁶⁾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독일의 사회학자 오페(Claus Offe)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러한 상이한 낚앙스와 강조점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오페에 따르면, ‘통합’이란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⁷⁾ 오페에 따르면, 사회의 거시적 통합은 정치, 경제, 또는 문화의 세 차원을 주축으로 하여 일어난다.

4) 최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p. 80; 한편 이은죽은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적 확립’을 사회통합의 핵심문제로 제시한다.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p. 47.

5)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전성우와 김택환은 제도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의 동서독 주민간의 거리감의 극복을 통한 인간적 통합을 사회통합의 핵심문제로 제시한다.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택환, “獨逸統一後 政治經濟社會統合의 애로가 韓國統一에 줄 敎訓,” 참조.

6)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이종석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p. 431.

7) Claus Offe,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 (Frankfurt/M.: 1994), pp. 230~276.

문화적 차원의 통합방식: 역사, 언어, 문화와 종교에 의해 논증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때로는 매우 국수주의적) 관념에 의한 사회통합.

정치적 차원의 통합방식: 헌법규범의 강력한 구속력, 억압적인 (경우에 따라 매우 억압적인) 정치제도, 그리고 이들이 정치갈등을 조절하고 집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한 사회통합.

경제적 차원의 통합방식: 투자, 생산, 소비의 상호관련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복지와 안전의 상식적 기준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사회통합. 분배 관련 갈등은 그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에 이바지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잘 통합된 사회는 세차원 모두에서 조정메카니즘을 구비하고 있을 수 있다. 서방의 중심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대량소비체제, 문화적으로는 제도체계에 대한 충성심⁸⁾과 대중문화 등의 다차원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회통합이 일어난다.

그러나 취약한 통합이라는 조건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중 어느 한차원이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조정 메카니즘의 구축을 이룬다. 예를 들어 구동독은 분단국가라는 현실때문에, 민족의식에 기초한 문화적 통합은 기능하지 않았으나, 동유럽에서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뜻에서 주로 경제적으로

8)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제도가 성립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문화, 행태, 규범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민주 시민적 정치문화가 결핍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독일식으로 표현에 따르면 '헌법(적 조항, 규범과 절차)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제도와 문화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Ibid., pp. 57~80 참조.

통합된 사회였다. 이에 비해 폴란드, 헝가리 등은 주로 민족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던 국가였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주로 억압적 정치지배에 의해서 통합된 국가였다.

이러한 오페의 개념 설정은 한 사회의 통합 상태에 관하여 매우 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페의 분석을 볼 때, 통합의 상태, 즉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는 반드시 어떤 사회가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에 처해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동독의 통합이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적 부자유와 억압, 그리고 민족문화적 정체성의 부재하에서도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 즉 통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설정에서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어떤 사회가 통합을 이루는 핵심 중추가 어떠한 것인가, 즉 그것이 정치적 차원의 것인가, 경제적 차원의 것인가 또는 문화·정서적 차원의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오페의 개념은 어떤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지속성, 안정, 행위조정과 참여,’ 즉 거시적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도와 상태, 그리고 그러한 통합의 정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북격차와 남북관계의 사회적 성격

분단상태의 남북한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군사적으로는 상호적대관계, 사회·경제적으로는 상호격리관계에 있었으며, 또한 양자사이에 상호적인 공포감과 적개심이 존재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양측에서 공통적이었던 남북한통일 요구에 의해, 그리고 단일민족 정서의

공동소유를 통해서 통합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기본상황은 '90년대 들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북측의 경제난에 따른 총체적 문제지역화이며,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군사 대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회하여 남북한간에 경제·사회적 접촉의 측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현저한 사회경제적 격차는 기존의 정치·군사적 남북한 관계에 부유지역과 빈곤지역간의 관계라는 사회적 성격을 첨가하고 있다. 또한 상호 사회·경제적 접촉면의 증대에 따라, 남북한은 사회·경제적 격리는 점차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리의 점진적 붕괴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민족정서적 차원의 통합축에 사회경제적 통합축이 첨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통합축은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통합 기회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갈등잠재성을 첨가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단순히 공동의 민족정서적 차원에서 유지되던 남북한사이의 통합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 북한의 경제·사회적 추락

북한은 '80년대 말과 '90년대에 들어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변화, 한국과의 국력격차의 급속한 증대, 내부 경제붕괴와 식량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경제는 지난 '90년부터 계속 7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심각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90년 -3.7%, '91년 -5.2%, '92년 -7.6%, '93년 -4.3%, '94년 -1.8%, '95년 -4.6%, '96년 -3.7%를 기록했다.⁹⁾ 이러한 북한경제의 지속적 축소

9) 통일원, 「'96년 북한 경제동향」 (서울: 통일원, 1996); 「한겨레신문」, 1997년 3월 23일.

때문에 남북한 경제격차는 명목GNP 기준으로 지난 '90년 10.9배에서 '96년에는 22.4배로 확대됐다. 1인당 GNP 격차는 6.5배에서 11.6배로 늘었다.¹⁰⁾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P)는 남한의 '75년 수준(2백9억 달러)과 비슷하다.

여러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사회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북한의 극도의 식량난이다. 간략하게 북한의 식량관련 통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간 6백50만~6백7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1992년 이래 매년 200만톤 이상의 만성적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식량부족분은 북한의 외환부족 때문에 자체수입에 의해서도,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유·무상원조, 국제기구의 무상원조 등에도 불구하고 메꾸어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식량수입후 부족량은 1992~1993년 120여만톤, 1994년 약 230만톤, 1995년 160여만톤, 1996년 215만톤에 달하고 있다.¹¹⁾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의 사회문제를 인간생존의 가장 원초적 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있다.¹²⁾ 북한에서는 수개월간 배급이 끊어지거나 극소량이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 현상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업지역, 도시지역 등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과 변방지역은 농산물수

10) 199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910달러로 계산되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조사월보」(1997. 7. 10), p. 31;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6월 유엔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95년 북한 1인당 GNP가 2백39달러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9백57달러와 네배 가량 차이를 보여준다.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23일 참조.

11)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서울: 대왕사, 1997), p. 173.

12) 식량난에 따른 북한의 사회실태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pp. 175~200; 이종석 외,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성남: 세종연구소, 1996);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연길조사단보고서」,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8일.

확과 국경무역 등으로 확보한 식량으로 굶주림을 면하고 있다. 식량난에 직면하여 북한의 생산과 기초적 공공용역이 마비되고 있다. 북한의 공장과 학교 등은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으나,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다. 관공서 등에서도 거의 소수 인원만 근무하고 있다. 또한 기아와 그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 식량획득을 위한 여성의 인신매매 등 사회윤리와 규범의 광범한 해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식량을 얻으러 다니는 주민의 유랑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붕괴 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기적 고립에 따른 외부영향력의 차단과 광범하고 체계적인 내부적 억압기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상황이 거의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봉쇄에 직면하여 북한주민은 비제도적이고 개인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제도권 또는 비제도권적인 차원에서 이익집단형성과 정치적 항의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인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구책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 그러한 자구책에는 텃밭 가꾸기, 암시장을 통한 물물거래, 구걸 등 다소간 일상규범적으로 무해한 것에서부터, 공공물건 도둑질, 개인소유물건의 도둑질, 강도, 인신매매 등 다소간 형사 범죄적인 것을 거쳐서, 북한 탈출 등의 다소간 정치적 차원에 이르는 것까지 망라되어 있다.

나. 부유-빈곤지역간 관계로서의 남북관계

'90년대 북한의 경제·사회적 위기 또는 붕괴의 가능성은 남북관계의 성격에 그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사회적 성격을 더해주고 있다.

'90년대 이전 냉전시대의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이 주로 정치적, 이

데올로기적, 군사적인 것이었다.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중국의 변화, 남북관계의 국력 격차확대에 따라, 먼저 '90년대 냉전시대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동-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차원은 상당히 퇴색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풀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관계' 건설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차원의 협상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서 과거의 남북관계에 새로운 중요한 차원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남북한간의 관계가 남-북간의 관계, 즉 부자-빈자간의 관계라는 성격을 강화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관계 패턴이 현재 남북한 관계에도 등장하고 있다.

부국과 빈국사이의 남-북관계에는 일정한 구조가 존재한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부국은 무장한 빈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빈국의 정치·군사적 양보 대신에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군사적 뜻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뜻에서 부국은 빈국의 내부 사회 상태를 최소한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으로써, 빈국의 내부 사회적 파탄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난민의 문제, 내란 또는 국가간 전쟁 발발 가능성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국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빈국의 가난한 노동자가 이주해 들어오게 되며, 이들은 부국에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국의 유복한 시민과 가난한 국가 출신의 빈한한 시민 사이에 서로 직접적 접촉이 증대하면서, 양자 사이에는 상호간의 편견과 불신이 증대하게 된다.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부국의 시민은 빈국 출신들에 대하여 인종적 배척 또는 법적인 추방 노력을 하게 된다.

현재 남한을 비롯한 남북한 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이 군사·외

교적 측면에서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외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아 내부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북한의 주변 국가들은 4자회담 등을 통하여 북측의 정치·군사적 양보를 대가로 한 대규모의 원조를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차원이 아니더라도, 북한 사회의 궁핍화와 사회문제적 잠재폭발력은 이미 탈북한 주민들의 중국에의 유랑, 일부의 한국으로의 유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만한 숫자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탈북자들의 한국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탈북자의 한국사회에의 적응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¹³⁾ 북한 ‘급변사태’시 그 수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미 북한의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안정에 대한 분담금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아직 탈북자가 소수이고 또한 분담금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의 사태가 앞으로 계속 악화되어 갈 때, 외국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남한 내부에서 상당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 남북한 관계의 사회적 문제와 갈등

현재 상태의 남북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남북간의 군사·정치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부자-빈자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세계사적 경험에서 볼 때, 그리고 현재의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의 관계의 경험에서

13) 1949~1996년간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유입한 북한 주민의 수는 총 616명이며, 이중 1991~1996년간 유입자는 134명이다.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위 통계는 같은 책, p. 6에서 재인용.

볼 때, 인접지역 사이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서 처럼 클 때, 두 지역 사이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경험에서 보더라도, 인접한 두지역 간의 격차가 이처럼 극단을 달리게 될 때, 부자 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남북관계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서유럽의 중심부 국가는 동중부 유럽이라는 ‘완충지역’을 거쳐서, 구소련 지역,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제3세계’와의 정치적 대결 및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서유럽과 ‘제3세계’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문화·인종적 이질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지구화’ 시대의 교통수단과 통신매체의 발전은 이러한 물리적 거리와 문화·인종적 이질성을 넘어서, 서유럽에 ‘제3세계’로부터 수많은 ‘경제난민’과 ‘정치망명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부자국가 주민의 비이성적 방어반응을 촉발시키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인종적 이질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남북한 사이의 냉전적 대결은 두지역을 상호 고립시켰으며, 따라서 휴전선은 남북한 상호간 현격한 경제·사회적 격차의 수위를 유지해주는 조절 댐의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의 지속은, 언어·문화적으로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인접해 있는 북측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격리때문에 북측의 사회문제 압력은 주로 중국 등의 지역으로 방출되고 있으며, 또한 그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남한은 최소한의 차원(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에서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격리는 인접지역의 총체적 사회문제 지역화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 상

태'에서 비교적 사회·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구화에 따라, 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우회하면서 남북한의 접촉 측면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통한 남북한 사회의 사회문제 차원의 상호격리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언젠가 남북한 사이에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획기적인 타협이 가능하게 될 때, 남북한 사회의 접촉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격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이미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이 남한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남측에의 북한 탈출자의 유입 점증 추세와 그들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논쟁과 한국과 외부사회와의 논쟁 등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격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측의 사회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할 때, 남북한의 긍정적·부정적 의미에서의 통일체 형성이라는 것은 남측에 주어진 하나의 '숙명'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을 남한 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남측은 인접한 북측과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정치·사회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 형식상으로 둘로 남아 있든 하나가 되어 있든 - 운명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예측을 할 때, 남한측에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보장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인접 지역인 북한 내부 상황을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과 수단을 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안정을 위해 남측이 지출해야 하는 대략의 비용 규모도 이미 시사되어 있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북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긴급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식량·생필품의 원조이다. 외부 식량조달에 대한 북한 자체의 지불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체부담과 국제원조에의 호소 등을 통해 수년간에 걸쳐 상당한 부담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밖에도 긴급재난 구호의 차원에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의료장비와 요원, 기초 생필품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있어야 되며, 북한에서도 특히 한계계층인 어린이, 노인, 유랑자, 고아 등에 대한 수용과 보호시설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북한의 농업 재건 등에 관한 광범한 원조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공장·기업소를 정상운영시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그것이 분단비용으로 불리우든 통일비용으로 불리우든 남한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서도,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북한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문제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북한의 개혁과 개방,'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남한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비용을 전략적인 뜻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남측의 노력과 수단에는 남측의 북측에 대한 무조건적 원조로부터, 남측 정부 차원의 대량원조와 그에 상응하는 북측의 정치·군사적 양보라는 계약에 입각한 조건부 원조를 거쳐서, 북측의 사회안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부로 남측이 북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력을 정치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4.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상의 기본문제

분단상태에서 남북한 사이의 격리와 통합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행정적 격리를 매개로 한 단일민족 정서의 공존, 그리고 대립과 격리를 우회하면서 진행되는 사회적 차원의 점진적 단일운명체화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통일의 경우에는 정치적 대립과 행정적 격리가 소멸하면서, 남북한 양지역간의 사회통합의 문제가 이제 국내 문제로 변화한다. 그 성격이 격리된 지역간의 문제가 단일지역내에서의 통합의 문제로 변화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 문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 도전은 통합에 새로운 기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을 함축한다.

가. 기본방향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두가지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한 국가 내에서의 사회통합이라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동안 격리되어 있던 두지역과 주민 집단간의 통합이라는 차원이다.

우선 보다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에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통합의 메카니즘의 기본모델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험적으로 볼 때 현대세계에서 한 국가내 사회통합의 최선의 상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대량소비체계, 문화적으로는 제도체계에 대한 충성심과 대중문화 등의 새차원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델은 현대 서방세계의 사회모델로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거나 또는 그를 지향하

고 있다. 물론 현재 그 상태가 보다 이상적인 기준에 접근했느냐 또는 최소한의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모델이 현대 서방세계의 각 국가에 실현되어 있는 구체적 양태와 강조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드러난다.

나. 통합의 동태적 성격

북한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현대 국가의 기본모델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와 협력에 기초하여 남측의 원조와 지도에 의해서 추진될 수도 있다. 이는 곧 남북한 사이의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희망과 기대를 배경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에 기초하여 체결하는 일종의 ‘통일계약’에 의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주로 북측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을 읽어보면, 북한의 체제개혁이 남측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유관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을 남측에게 인도하는 대가로 북측 주민은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계약’을 남측의 입장에서 읽으면, 여러 차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하며, 북측지역을 남측 주도하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측주민에게 열리는 여러 차원의 유망한 기회발생에 대한 대가로 남측은 북측에 상당한 물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 지역의 통치와 번영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통일계약’의 ‘상호적 조건부 계약’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양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준수는 다른 측이 계약의 단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

성해 가느냐의 여부에 조건지워져 있다. 계약 집행 과정에서 상대측의 계약 준수 여부에 따라 어느 일방에 의해서 그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통일계약'에 이르기 까지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상호간의 실제적인 경험과 신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한 신뢰는 일반 주민 뿐 아니라 주요 엘리트 사이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의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특히 장기적 차원에서의 현실적 평가와 예측은 - 마치 남녀간의 결혼서약의 경우에서 처럼 - 매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또는 예상의 빗나감을 근거로 계약의 파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태도 올 수 있다. 어쨌든 여러 문제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통일계약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통일계약'의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 짧은 기간이나마 - 다소간 맹목적이고도 환상적인 낙관과 믿음이 필요하다.¹⁴⁾

이러한 문제 설정에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견이 함축되어 있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첫째로 기본 작업의 내용은 북한 지역에 이러한 기본모델을 건설하는 것이며, 기본작업에서 남측의 지도와 원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

14) 이러한 다소간 맹목적이고 희망적인 낙관은 동서독 통일의 서독측 주요 정책추진자에게서도 나타났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 동독경제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며, 따라서 통일비용은 동독경제 자체의 부흥에 의해서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H. Wiesenthal, "Unification Myth: Cognitive "Coping Strategies" in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in A. Pickel and H. Wiesenthal, *The Grand Experiment: Debating Shock Therapy, and the East German Experience* (Boulder: Westview Press, 1997), pp. 198~211; Wolfgang Seibel, "Necessary Illusions: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New Germany," in Christopher Anderson, Karl Kaltenthaler and Wolfgang Luthardt, eds., *The Domestic 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pp. 117~134.

화적 차원에서의 각 정책은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전적으로 성장 대 복지 및 사회균형의 문제, 단기적 개인적 이익 대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통일의 성과 평가를 둘러싸고 남북한 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일이 비교적 잘 되어 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성과가 상호적으로 기대수준 이하에서 나타날 경우 상호적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도와 원조의 입장에 선 남측과 피지도와 피원조의 입장에 선 북측은 당면상황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상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넷째로 이러한 기본모델의 성립과 운영 실태에서 남북한이 상호 근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남측의 견인 능력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통합에는 비교적 낮은 단계 또는 보다 높은 단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통일후의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여러 차원의 메카니즘의 합주와 갈등에 의해서 동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치와 의식구조의 이질성의 극복'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으며, 또한 사회정책적 차원만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또한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 분단이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는 과제와 함께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의하여 틀이 지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후 남북 사회통합은 통일의 부담과 실적에 따라 어떤 때는 보다 이상적이고 높은 차원에서 어떤 때는 보다 갈등적이고 낮은 차원에서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그릴 수도 있다.

다. 사회통합상의 기본 문제

여기서는 통일후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과정과 시기적 진행에 영향을 끼칠 사안들은 1) 경제·사회적 격차의 차원, 2) 제도적 통합 문제의 차원, 3) 문화·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문제는 남측 제도체계를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북한측 주민의 대다수가 삼중의 의미에서 한계집단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 주민은 구체제가 물려준 유산으로서의 절대적 빈곤, 그리고 통일 이후 극명해지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사회적 의미의 한계집단화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주민은 남측 제도체계에 대한 소외집단화와 부정적 통합 집단으로서의 제도적 한계집단화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러한 이중의 한계 및 소외집단화의 의식에의 반영으로서 북한 주민의 남측 주민에 대한 편견과 방어적 한계설정 노력이 증대될 수 있다.

(1) 경제·사회적 차원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차원은 남북한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즉 통일에 의해서 북측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실제 경험이 존재하며, 또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가 북측 주민에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또는 통일 때문에 남측의 성장과 복지,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실제 경험과 예측이 존재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 북한에서의 경제붕괴, 식량난에 따른 북한 주민 대다수의 사회적 한계집단화는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사

회정책에 이점과 어려움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이점의 차원에서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경우나 구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서 구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의 건설과 가동하기까지의 '중간기간' 동안 이른바 '눈물의 계곡'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경제의 대외불균형과 국내 인플레이션의 개선노력, 구래 산업의 광범한 폐기 등의 요구 때문에 재정긴축과 국민경제의 규모수축, 대량실업, 광범한 생활수준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체제전환의 성과는 구체제 말기의 생활수준의 회복이 준거점이 되어서 판단된다.

남측 주도의 통일과 북한체제의 급진적 개혁의 경우에도 북한지역 구산업의 광범한 폐기와 그로 인한 대량실업과 생활수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통일이 없어도, 그리고 체제전환이라는 지향이 없어도, 북한에서는 '90년대 이후 연료난·원료난·식량난 때문에 구산업의 사실상의 폐기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와 더불어 고용기업과 결합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체계는 사실상 붕괴했으며, 공장가동 중단에 따라 사실상의 광범한 실업 상태가 만연하고 그와 더불어 개인 직업적 숙련의 무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식량 획득을 위한 유랑과 가족관계의 해체 등의 경향에서 대표되듯이 구래의 지역 차원의 인간적·대면적(對面的) 생활관계가 광범하게 붕괴하고 있다.

결국 '90년대 북한의 경제붕괴는 역설적으로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남측이 지게될 것이 분명한 부담과 책임을 일정수준에서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북측의 한계 상황때문에 통일 이후 북측 주민의 구체제에 대한 향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며, 이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의 용의와 능력을 높여줄 수도

있다.¹⁵⁾ 식량난이 대표하는 현재의 한계적 생활 상황때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준거치가 미래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나, 혼란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북한주민의 적응력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더 악화되기가 어려운 현재의 한계상황과 혼란 상황은 앞으로의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도 북한주민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상당한 기간의 미래의 특정시점에 생활수준과 질적 향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주민 대다수의 사회적 한계상황과 남북한 사이의 생활 격차는 남북한 통일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북측주민 대다수를 사회정책 시혜대상으로 남게 할 것이다. 현재 식량난의 여파는 영양실조에 의한 장애인, 교육기회 상실자, 장기실업에 의한 숙련 상실자, 가족파괴와 유랑 등에 따른 무능력자와 부랑자의 광범한 증대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통일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북측 사회를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데 따른 남측의 부담을 무겁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북한에 대한 긴급 구제성 대량 원조는 통일 직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초기의 긴급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북측에 대한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북측의 낮은 생산성과 경제회복에 걸리는 상당한 시간 때문에 북측에 자생력있고 체계화된 사회정책과 보장제도가 정착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북측에 대한 사회정책과 보장체제도 남측의 원조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긴급구제가 끝난 다음 정책과 제도 건설 단계에서 북한지

15)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노선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사회주의가 거의 실패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소련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저항, 과거에의 향수가 존재했다. 박형중, “구소련·동유럽과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의 비교,” 『유럽연구, 1997년 봄호 (1997), pp. 135~139.

역의 사회정책과 보장제도는 북측의 한계집단인 실업자, 장애인, 노인, 고아 등을 우선적이고 중점적 정책과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에 체계잡힌 '사회적 재건과 직업교육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교육기회상실자, 무능력자와 부랑자 등을 집단별로 선별 수용하여, 직업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해야 한다.¹⁶⁾

(2) 제도통합의 차원

남북한 사이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성공적인 제도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이식과 통합이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 단계로서 각 분야 단체를 매개로 한 해당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거론할 수도 없게 된다.

통일과정에서 북측에 이식된 남측의 제도체계는 북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각기 해당 분야에서 대표성과 정당성, 그리고 실제 행정능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각 분야의 단체는 해당 영역의 집단과 주민을 교육시켜며, 이익을 제도권내에서 형성하고 표출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각 단체는 해당 분야에 속해 있는 북한 주민이 낯선 남측제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북측 주민들에게 정치·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교정하고자 하는 요구를 북측 주민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정

16)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 사항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하여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참조.

지적 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의제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이고 평화적 절차를 통해서 중재하고 타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도가 기능하는 데 불가결한 사회구조와 사회·정치 문화를 창출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제도이식과 통합의 문제의 남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한측 국가기관, 준국가기관, 민간단체 등 여러 단체의 취약성이다. 남측의 제도이식의 통합 과정에서 남측의 국가는 주요한 전략적 행위자이고 조정자이지만 각개의 하위 통합과정은 해당 준국가단체, 이익단체, 사회단체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의 한국내 조직기반, 행정요원, 자원기반이 취약하여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맡겨진 기능을 해낼 수 없거나, 또는 행정부와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그러한 업무가 맡겨지지 않는 경우, 또는 유관 단체간의 대립때문에 운신마비가 초래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정책공백, 제도통합의 결핍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백과 결핍이 다수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 북측 지역의 제도이식과 남북한 사이의 제도통합은 궁극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제도이식과 통합의 문제 가운데 북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북측에 남측의 여러 제도체계를 이식하는 경우, 북측에는 이식된 제도체계를 뒷받침해 주고 보조해줄 만한, 역사적 경험, 사회구조, 사회·정치문화 체계가 부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측의 제도체계는 북측에 외형상 이식될 수 있으나, 곧바로 북측 지역에서 제도와 문화 체계의 상호표류, 북측 주민의 남측 제도에 대한 이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게 된다. 북측 주민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사회·문화적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여러 여건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남측 주민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북측 주민의 상황해석, 대응방식, 필요한 가용자원 등은 구체 제로부터 축적되어 온 관습과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주민의 남한측 제도체계에 대한 무지와 소외, 남한식 제도체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숙련과 자산의 부족 등 때문에 강화될 수도 있다.

(3) 문화·정서적 차원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상대방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는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사회의 격리, 역사적 경험의 차이, 그리고 통일과정이 남북한 주민에게 지우는 여러 차원의 부담 등 때문에, 남북한 주민 사이의 차이의식과 거리감은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과정에서의 여러 조치의 성격과 추진방식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상존하는 남북한의 이질감과 감정적 차원을 더욱 악화 혹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 통일에 의하여 북측의 꾸준한 생활개선과 정치적 참여의 기본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남북한 주민간의 정서상의 문제는 설령 소멸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남측의 북한에 대한 긴급구제 상황이 끝나고 좀 더 장기적이고 복잡한 제도이식과 통합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북측 주민은 통일때문에, 북측주민이 남측의 결정과 자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거의 모든 경쟁분야에서 남측주민에게 열세에 놓이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차이, 소비와 여

가 문화의 차이가 상당기간 동안 극복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점점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지역에서 한편에서 '이등국민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편에서 남측 주민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제압을 통해 자신의 자아(自我)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다.¹⁷⁾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 자체가 남북한 통일의 성패, 사회통합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북한주민은 통일 자체와 남측의 제도체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문화·정서적 차원에서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 배타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오히려 일정하게 강화될 수도 있다.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주민 대다수가 경험한 정체성 위기, 구체제에서 쌓아올린 유·무형의 자산이 허무하게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북한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집단적 반성과 성찰의 반응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심각해질 수도 또는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악화되는 경우는, 제도이식과 통합 과정에서 특히 통일한국의 경제상황의 악화, 그로 인한 남측의 북측에 대한 재정적 기여의 삭감, 북한

17) 통일독일에서의 경험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Claudia Ritter, "Politische Identitä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stinktionsbedarfe und kulturelle Differenzen nach der Vereinigung," Helmut Wiesenthal (Hg.) *Einheit als Privileg. Vergleichende Perspektiven auf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6); Detlef Pollack, "Sozialstruktureller Wandel, Institutionentransfer und die Langsamkeit der Individuen. Untersuchung zu den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der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d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der Sozialen Welt," (Frankfurter Institut für Transformationsstudien, Arbeitsberichte. 5/96).

에서의 실업증대, 생활수준 미개선 등으로 통일에 의해서도 북측주민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질 때 일 것이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하여 북측 주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러 상황에 따라 반드시 불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좋아지기도 때로는 나빠지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든지 북한주민이 판단하기에 통일과 남측의 기여때문에 북측 주민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할 때, 또한 북한에 이식된 남측의 제도체계가 북측 주민의 정치·사회적 참여와 신분상승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사태발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오랜 분단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사이의 통합은 민족정서적 일체감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일체감은 그간의 남북한 사이의 다면적이고 강력한 격리에 따른 상호 접촉 불가능성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북한의 총체적 사회문제 지역화, 그리고 정치·군사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회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접촉의 증대에 수반하여 변화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의 오랜 동안에 형성된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의 한민족의 위치를 고려하면, 이러한 민족적 일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남북한 통일을 위한 주요한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한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지역-빈자지역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문제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남북한 사이의 통합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뜻한다. 어쨌든 남측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인접지역인 북한 지역의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앞으로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아직 정치적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남측의 북측에 대한 동포적 애정은 남측이 비용을 분담하는 데서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의 이러한 원조는 남북한 사이의 새로운 통합과정의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남측과 북측간의 정서적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남측과 북측간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의 밀도가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제기하는 도전은 점차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격차와 그 관계의 사회적 성격은 통일의 성격과 그 이후의 남북한 사이의 사회통합의 과정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남측은 북측의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조국가, 그리고 지도적 역할을 통해서 북측에게 남측으로의 통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은 남북한 사회의 통합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제기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의 사회적 통합과 갈등은 통일의 성과가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달리 나타남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이 마치 정합게임처럼 되어가고 있을 때는 통일때문에 초래된 남북한 각각의 내부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많은 문제들은 관리될 수 있는 한계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남북한 각각의 사회에, 그리고 남측과 북측 사이에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대량소

비체제, 문화적으로는 제도체계에 대한 충성심과 대중문화 등의 세차원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북측 지역의 꾸준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다원주의의 보장, 복지국가, 대량소비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간의 소득수준과 소비문화의 격차를 점차로 줄여갈 수 있다는 신념, 집단적 또는 시민권 차원의 이익표출을 위한 동등한 정치적 참여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신념 등이 북측 주민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 또한 여러 격차가 남아있는 한 남북한의 이질감과 감정적 차원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의하여 북측의 꾸준한 생활개선과 정치적 참여의 기본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면, 남북한 사이의 정서적 차원에서의 마찰은 설령 소멸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현재 분단상태에서 남북한 사이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의 문제 등은 그 사안이 결과하는 비용과 이익의 손익계산에 따라 관여할 수도 또는 불관여를 선언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비용과 이익에 관계없이 남북한의 한민족이 처리하고 관리하지 않으며 안되는 문제이다. 그러한 과제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분명 어려운 도전을 뜻하고 있지만,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 공유식. “베트남의 사회통합: 국가형성의 조건과 과제.” 『亞洲社會科學論叢』 제7호 (1994년 2월).
- 김택환. “獨逸統一後 政治經濟社會統合의 애로가 韓國統一에 줄 敎訓.” 『韓國敎員大敎授論叢』 (1993).
-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嶺南大統一問題研究』 제16호 (1994년 2월).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형중. “구소련·동유럽과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의 비교.” 『유럽연구』 1997년 봄호 (1997).
-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서울: 대왕사, 1997.
-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이은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종석 외.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1996.
-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이종석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 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6호 (1995년 6월).
- 최 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논단』 제6권 (1992년 12월).
- 통일원. 「'96년 북한 경제동향」. 서울: 통일원, 1996

- Offe, Claus.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 Frankfurt/M.: 1994.
- Pollack, Detlef. "Sozialstruktureller Wandel, Institutionentransfer und die Langsamkeit der Individuen. Untersuchung zu den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der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d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der Sozialen Welt." (Frankfurter Institut für Transformationsstudien, Arbeitsberichte. 5/96).
- Ritter, Claudia. "Politische Identitä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stinktionsbedarfe und kulturelle Differenzen nach der Vereinigung." Helmut Wiesenthal (Hg.) *Einheit als Privileg. Vergleichende Perspektiven auf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6.
- Seibel, Wolfgang. "Necessary Illusions: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New Germany." in Christopher Anderson, Karl Kaltenthaler and Wolfgang Luthardt. eds., *The Domestic 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 Wiesenthal, H. "Unification Myth: Cognitive "Coping Strategies" in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A. Pickel and H. Wiesenthal. *The Grand Experiment: Debating Shock Therapy, and the East German Experience*. Boulder: Westview Press, 1997.

종합토론

제 1 부

- 사회: 도홍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유팔무(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병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성홍(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

사회자: 오늘 발표를 통해 보았을 때 중국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개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 농촌내에서의 갈등 및 격차가 부각되고 국가권력의 주도적인 개혁방식에 대한 인민들의 반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의 개방·개혁을 전제로 단계적 통일접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이 만약 중국식의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사회학적인 접근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례들을 살펴보니 정치와 경제문제에 못지 않은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팔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유팔무: 논문발표 순서를 보면 독일의 경우를 먼저 발표를 하고, 중국의 경우를 발표하셨는데,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사회주의 사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상황은 이중적인 역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 민중의 국가를 표방하는데, 동독은 노동자들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후, 무너지고 서독으로 들어가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날 통일이 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전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의 상황진단이 될 수 있으며, 요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독일의 경험을 보면서 남북한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남한에서 통일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교수님은 급작스러운 흡수통일은 배제하시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도록 하고 양자가 서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진단,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함의를 찾는 문제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여름에 본인이 독일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소감으로서 그 동안의 독일이 달라졌다고 생각된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교수님의 발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동서독인들간의 이질감, 동독인들의 열등감, 통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향수의 증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구동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주의적인 것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독일교수가 독일이 앞으로 정상화가 되려면 짧아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 통일이 되면 현재 독일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예견한 데 대하여, 본인은 한국의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유치원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구서독출신 학부모들이 구동독출신 학생과 같이 반을 편성하는 데 대해 학교 당국에 항의하는 등 독일내 지역갈등 및 구동독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한 나라이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한의 퇴폐풍조 등의 부정적 일면이 가장 먼저 북으로 진출할 우려도 높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독일의 경우보다 우리의 경우가 훨씬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대화와 합의에 의한 정치와 의사결정 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일 직후 남북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교수님의 지적대로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고 장차 자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교수님의 진단과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 몇가지 추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사회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거친 표현과 부적절한 개념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동독 국민들의 국민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동양과 서양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차이는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발전 모델을 제2의 근대화라고 말씀하신 점과 한국 자본주의는 자성적 근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관계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 민주공동체 복지국

가, 제2의 건국, 해방후의 건국준비위원회 등이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공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교수님께서 기대하는 사회통합은 적어도 한 세대 이상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남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교수님은 남한은 자성적으로 개혁을 하고 북한은 자율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전교수님의 말은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내용중 건국준비위원회 등의 단일 국가론은 전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통합과 인간통합이 통일인지 체제통합인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회이든지 내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사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영호남의 지역갈등이나, 독일 남부지방의 바이에른주, 이탈리아 남북지역갈등, 미국의 인종갈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교수님의 구상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통일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회자: 김호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교수님께서 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사회학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분석하신 것에 대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토론되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앞서 유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검토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유교수님께서서는 사회통합, 체제통합에 대해서 명시적인 개념정의

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전교수님께서서는 사회의 집단적 자의식,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연대방식을 사회적 통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제통합과 대비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회학적 지식으로는 이러한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분류라는 것은 영국의 사회학자 락우드가 처음 이론화하고, 최근 하버마스과 기든즈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은 대략 3가지 정도 수준에서 관계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이 독립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전교수님의 논문에서 체제통합에 대한 사회통합의 독립성을 잘 부각시켜 주셨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독립적 과정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매개시켜 보았을 때,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시간격차의 문제를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체제통합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사회통합은 그것의 내재적인 성격상 장구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19세기 독일통일의 경험이 그러하고, 국제적으로는 베트남의 통일과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단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체제통합의 진전입니다. 체제통합내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제도적 정착들이 보다 잘 완비된다면 사회통합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교수님이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모순단계입니다. 전교수님의 논문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이 가질 수 있는 모순적인 관계인데, 바로 여기에서는 두번째 문제인 전교수님이 제시한 제3의 근대성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3의 근대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전교수님은 제3의 근대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민주공동체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와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해 저는 회의가 많습니다. 주지하듯이 공동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나, 역사적인 면,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공동체와 시장의 통합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인 불평등을 제도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규범적인 비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플라니가 강조하고 있듯이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적인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동구사회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자본주의의 경제질서와 경쟁함으로써 패퇴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합리성, 바꾸어 말하면 형식적인 평등을 시장질서가 보장해주고 있다는 강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시장 혹은 시장적 공동체가 현실속에서 작동되어 질 수 있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병로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병로: 저는 장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장교수님께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과 계급갈등 현상에 대해 국가중심적 계급관계론이라는 이론적 틀에 맞추어서 잘 조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주의체제가 변혁과정에 있고 아시아지역의 국가나 쿠바 등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이론적 틀에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문제를 편파적 시장화라는 분석의 틀에서 보고, 편파적 시장화에서 소외된 사회집단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이나, 그 시장경제내에서 부를 축적한 부유층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가권력의 분신으로서 당관료나 당간부들에게 정치적 세력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시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편파적 시장화 현상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독특한 중국식의 정치·경제체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서 상당히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북한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것이 개혁과정에서 대외개방 부문에 편파적인 시장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연구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론적으로 조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내부에서 대외개방 중심의 편파적 시장화가 진행된다면 내부의 농민, 노동자, 지식인 등의 집단들은 수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장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논문내용 가운데 개발독재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북한의 개혁·개방을 예측하면서 최근 '60~'70년대의 개발독재 모델을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교수님은 개발독재 시기의 모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내부에서는 이념적인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정권 시기에 개발독재식의 모델을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발독재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전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교수님께 일반적인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편파적 시장화라는 현상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체제란 국가권력의 독점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시민사회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국가중심적 현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시아적인 유교문화의 특성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구소련의 경우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구지배 집단이 개혁과정에서 이권을 형성하였는데, 장교수님께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가권력을 강조하면서도 상당히 서구적인 틀, 즉 동유럽이나 러시아 경우의 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틀 내에서 정책이 형성되었다면 내부에서는 로비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편파적 시장화내에서의 부정부패 등의 현상을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식인에 관한 문제로서 지식인이 개혁·개방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보고 「천안문사태」 등을 분석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식인은 사회주의 발전 이전부터 소외된 집단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과정에서 특별히 더 악화된 상황도 아닌데, 이것은 지식인의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문사태의 경우도 개혁개방화 과정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가 유입되고 거기서부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발로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번째는 개발독재에 관한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등소평을 비롯한 지도층이 선부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서민층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데, 지도층에서는 선부론에 대해 갈등이 없었는가, 그리고 계층간,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엘리트 내부에서는 이견이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개혁이 일어난다면 군수산업이 민수화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 각 집단들이 국가권력에 접근하여 민수화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군부가 이 과정에서 개입함으로써 나타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전성홍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홍: 기존의 중국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대부분의 주제들이 중국의 성공적 개혁 추진에 대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른 기존의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존의 연구가 중국개혁의 성공적인 비결을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장교수님의 논문은 남북

한 사회통합에 관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으며, 중국에 관한 재미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편파적 시장화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기하고 있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과 심각한 내부체제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위기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근본이 되는 불평등과정이 바로 부조리, 부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김병로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양한 사회집단과 담합,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시혜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착취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기준과 목표로 해서 국가가 사회의 재배분과정에서 간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가 궁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즉 경제발전인가, 체제안정인가, 아니면 제3의 사회가치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력(access)을 가지고 자신의 권익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주로 부정부패, 부조리로 설명하셨는데, 개혁이 추진될수록 다양한 사회집단들도 국가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파적 시장화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구조에 대해서 비시혜적인 계급이나 집단들이 불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불만은 개혁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인가, 아니면 개혁이 가져온 결

과나 효과에 대한 반대인가가 궁금합니다. 대개 중국인들은 어떤 집단을 막론하고 이율배반적인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혁노선 자체는 지지하지만 개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중적인 태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교수님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완전시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서 중국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해결과제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성장이테올로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개혁이 모든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딜레마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체제변화와 성공적인 개혁 추진이 대만과 대륙간 사회통합에 변화를 줄 것이며, 소위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에 의한 경제·사회적 통합이 결국 정치적인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그 사례로서 지적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대만과 대륙은 개혁 이후 많은 교류가 증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대만사회내에서는 대만독립에 반사회 통합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기때문에 체제변화와 양안관계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는 문의한이지만, 장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예상되는 선택, 즉 특구형태의 대외 개방정책이 궁극적이고 자생적인 진로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체제내적 개혁없는 개방만으로 북한이 경제발전이나 변화모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북한의 대외개방이 중국에서 처럼 제한적 특구상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점진적인 모델을 따르기에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국가규

모가 훨씬 크고 특정지역내에서의 체제변화에 충격을 완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특구와 같이 특정지역에서의 개방실험이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토론에 대한 반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의 발표자께서 토론자 분들에 대해 상당히 동조하며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반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두 나라의 사례들을 우리의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통일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며, 향후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압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보다 통일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가 통일적인 상상력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2 부

- 사회: 서재진(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토론: 이찬희(교육개발원 방송통신 교육연구본부장)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두 분 발표자들께서 주어진 시간내에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형중 박사께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다원화된 수준에서 개념 접근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구분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시간별·지역별·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남한과 북한에서 보는 시각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보는 각도를 기계적인 해석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확장하였고, 또 정책적인 대응이 용이한 해석과 접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두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전속자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찬희 박사님과 이화여대 함인희 교수님, 박형중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 서울대 박명규 교수님과 민족통일연구원의 이우영 박사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찬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찬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의 역사교과서 분석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 때문에 북한사회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런 자리를 통해 오히려 많이 배울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 초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남북의 창」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최근 중국측 접경지역에서 촬영한 화면 등을 통해서 볼 뿐이며, 따라서 피상적인 것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봤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북한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과서 내용의 질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남한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통합, 사회통합, 더 나아가서 남북통합을 고려할 때 남한에 대한 북한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과서 분석 뿐만 아니라 저널 분석을 통해 북한여성을 이해하려 했던 것도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을 발전적으로 진행하여 통일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헌연구의 한계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과서와 저널 등을 분석을 해 보았지만, 그 한계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교과서가 '70년대 교과서와 '80년대 교과서, 그리고 작년에 나온 교과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70년대나 '80년대 교과서를 가지고 '90년대를 들여다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귀순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중에는 유아원 교사나 지식인

계층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한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에서 교육통합과 사회통합을 접목시킨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통합을 이야기할 때 정치·경제·교육·사회를 분리해 왔었으나, 오늘처럼 교육과 사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한 점은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통합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인희: 저는 처음 이 논문을 보면서 지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북한 계순희 선수와의 인터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 그 선수는 '이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개 '오늘에 나를 있게 해 준 코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얼굴이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체제의 상이성에 따른 인성 형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주변 사람의 반응은 '그 친구가 상을 타기 위해서 북한에서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남한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각 체제가 어떤 인간을 만들어 내는가는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누군가가 연구를 시작하면 그 연구들이 고정되면서 그 다음 연구자들도 반복을 거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구자료가 분석시각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에서 전교수님의 논문에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서 내용분석 시각이 연역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교수님은 북한에서 이상화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과서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내용 및 자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귀납적인 활용을 통해 교과서에 담겨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즉 북한을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교육이 세뇌기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교육의 문제와 북한에서의 이상적인 여성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과 교육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저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가 만났을 때 불평등이 더욱 강화될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교육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통합이 되었을 때 통합방식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확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논문과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데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여성과 노인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이라는 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다른데, 즉 사회주의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로 규정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 규정된 여성이 갑자기 여성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타이어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다가 점차 동화되어 가면서 이전의 체제에서 보호받던 여성노동력이 체제 변화과정에서 모든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을 규정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여성과 전통적인 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체제 위기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북한이 점차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의 전통성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여성을 분석하면, 사회적 위기상황이 증폭될수록 여성을 보는 시각자체가 '전통적'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합이라는 것이 제3의 인간형이나 제3의 모델을 모색하기 보다는 그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교육, 그리고 성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통합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두번째 논문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명규: 박명규입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사회통합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 혹은 정치·군사적인 시각만 가지고 접근하는 단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통일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체 사회적인 관심이며, 박형중 박사님의 논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적·문화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좁은 의미의 사회통합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박형중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기존의 사회통합에 덧붙여 문화적 이질화나 의식상의 격차, 그리고 복지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것을 넘어선 전체적인 통합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이면서 전체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끌어내서 좀 더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학자들의 경제통합논의와 정치학자들의 정치통합논의와 상호 협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통합양식을 가지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통합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좁은 의미에서 사회·문화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비정치적·비경제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논의자체가 실제로 남북한간의 사회통합이라고 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박사님의 글 속에는 일부 사회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단체제 상태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간의 교류도 국제교역 수준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남북한은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요소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말할 때 통합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회통합 논의는 규범적이거나 당위론적인 혹은 예방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통합을 이야기 할 때 대한

민국의 통합을 증대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불만과 긴장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을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일면 남북한을 하나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통일 내지는 통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합은 크게 보면 우리식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과 제3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3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상이한 통합방식을 단기적으로는 전제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합양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로서의 통합성을 상당부분 유지해 나가는 논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몇몇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 사회로 끌어들이 전체적인 통합을 증대시키는 원리들을 만들고 확장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고 가능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탈북자문제라든지 해외 한인문제라든지 남북한간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로 인한 어떤 나쁜 과거의 실패사례에 대한 미시적인 검토가 보완된다면 이런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성격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시사점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이우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우영: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사회통합에 대해 참으로 좋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이 최근 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대책이나 제도적인 면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사회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가 여전히 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사회통합에 대해 논의할 때는 모든 의식이 동일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동일해야 되며, 한가지 가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된 한국에서 추구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검토해야만 통일논의와 관련한 사회통합 논의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형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통합의 개념 구분 등은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박명규 교수님께서도 오페의 개념을 통해 이야기 하셨는데, 문제자체는 바람직하나 제가 보기에는 통합의 개념이 이 글에서도 아직 미완성인체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면 세 가지 차원으로 분리를 한 것이라면 세 가지 차원의 분리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실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세 가지 차원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사회통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정치사적 경험이나 문화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 전체적인 사고로 전화될 위험이 많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체제와 민족의 문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두번째 순서는 남북한관계에 대한 논의인데, 박박사님

주장에 따르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니까, 남한이 부자가 된 '90년대의 상황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논의가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접촉증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90년대 들어서 남북한간의 접촉이 증가되어 남북한간의 상호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접촉의 증대가 반드시 통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접촉을 해보니까 헤어지는 편이 좋더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접촉성의 증대가 기계적으로 통합성의 증대로 이어지는가 여부는 제 의견과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으로, 정서적 통합이라는 것이 박박사님께서 보신 통합의 기본방향과 비교하여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두 분 발표자께서 시간관계로 논문의 핵심 주장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토론자들께서 오늘 발표된 논문들의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우선 발표자에게 기회를 드리기에 청중석에 계신 분들께 질문 및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의 논문발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거나 토론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2부의 종합토론과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응택: 저는 월남동포의 한사람으로써 올해 나이가 85세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통일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발표가 좋다고 생각되지만, 제

가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이론적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대개 50대 이하의 세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 공산당을 우리와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남북회담을 400번을 넘게 했어도 제대로 된 것은 한번도 없고, 최근의 4자회담도 성사되어도 딴 소리 할 자들입니다. 물론 북한주민이 굶어죽는데 도와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함부로 도와주는 것은 도리어 통일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도와줄 때 저자세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북경을 통하지 말고 판문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말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는 중국이 문제이며, 중국이 한국을 돕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중국과 최대한 외교노력을 기울이면 북한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성명미상: 저는 지금 60대 중반이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북한의 경제학과 관련된 고등교육교과서를 읽어보니, 결론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이면서 동시에 사상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참고서만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이 북한주민들이 아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북한의 실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북한과 교류하거나 무리해서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교류하고,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 지극히 전쟁을 해서라도 통합을 해야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의 백상창입니다. 원래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인격의 정신통합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의 정신통합이라는 것은 노이로제 환자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감정 및 의사와 행동이 분열되어 있을 때 통합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통합·국가통합·체제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통합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통합을 합니다. 따라서 통합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민족통합은 지난 50년간 남북한이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자유시장주의로 남북이 갈려졌는데, 그 동안의 공통분모를 어디서 찾고 어디에 접목하여 건강하게 통합시키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남쪽과 북쪽이 갈아지자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능적 통합이 역할통합에 필요하더라도 생각합니다. 즉 남북한의 통합은 어떠한 역할을 남북한이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더 질문이 없으면 두 분 발표자에게 반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숙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속자: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북한을 연구할 때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의 빈곤입니다. 함인희 선생남도 지적하셨지만, 누가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놓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히 교과서나 조선여성을 택한 이유에는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나 인간상은 그래도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였습니다. 북한귀순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보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논문에서 귀순자들을 30여명과 면담을 해 보지만 정확한 북한 현실 자체에 대한 30명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회질문조사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차라리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교과서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귀납적 방법은 제가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 시도해 보았지만, 귀납적 결론으로는 논문의 형식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개방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요소가 극대화되면서 가장 희생을 당하는 쪽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인희 선생님의 지적은 시사적이고 연구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공통분모는 전통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성이 강조되다 보면 자본주의체제에서 희생당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정하고 극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두 분의 평가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형중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중: 저의 기본적인 관심은 사회통합 개념을 현재 남북한의 구체적인 정세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책형성이 가능한 방식으로 조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항상 조성된 정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낙관만을 준다든지 단순히 우리에게 비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와 위협을 같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위협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남북한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두 개의 시나리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은 상호 격리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날 갑자기 급속히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단계가 존재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간의 사회격차는 1인당 GNP 11:1의 차이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엄청난 인구집단이 하나의 경계선을 두고 이와 같은 사회적 격차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호격리도 아니고 갑자기 통일되는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남북한의 접촉이 증가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통합을 논할 때 너무 문화·정서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사회정책적 사고가 필요하며, 두 이질적 체제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도통

합의 문제도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제로 등장합니다. 남북한 간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사회정책적 차원과 제도통합의 차원에서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그것은 곧바로 남북한 통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정서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문화·정서적인 차원의 통합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제는 남북한 사이에 사회정책적 측면, 제도통합적 측면에서의 우선적인 성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와 네 분 토론자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독일과 중국의 사례에 이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의 사회통합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흔히 사회과학자들이 논문이나 토론을 할 때 자기가 주제로 잡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의 사회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관한 한 독일에서 들려오는 보도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 남북한이 통일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고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최근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분위기로 조성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네 개의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만, 역시 사회통합문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밝혀내어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통합이 사실상 사회적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실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시각에서 사회학적인 비유를 한다면, 통일로 인

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하나의 체제가 되었을 때, 새로운 체제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체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에 이질화된 체제에서 살아왔지만 그 이전에 반만년이라는 긴 문화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고, 또 한편으로 북한이라는 체제가 대단히 전체주의적이고 우리 사회와는 다른 체제로 생각하지만 그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북한 체제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접해보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해서 통일의 분위기를 해치는 여론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사회문제화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일정>

13:00~14:00 등 록

14:00~14:15 개회사 : 정세현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환영사 : 전숙자 (북한사회연구회 회장)

14:15~16:00 1부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도홍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 토론 :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병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성흥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

16:15~18:00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 ◇ 사회 :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팀장)

- ◇ 발표 : 전숙자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교수)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통합의 관점”
박형중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 통합”

- ◇ 토론 : 이찬희 (교육개발원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장)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종합토론

- ◇ Reception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차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 외 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의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삼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p>■ 통일문화시리즈</p>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p>■ 논총</p>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